

프로그램

참여연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평화와 법센터) 공동주최 토론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 방안

1부 아태지역 정부들의 안보전략과 시민의 우선순위

- | | | |
|------|------|--|
| 1:00 | 환영사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 1:10 | 사회 | 정태욱 / 인하대 |
| 1:15 | 제1발표 | 우방국의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는 아시아에서의 미국 군사전략
존 페퍼 / 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 1:30 | 제2발표 | 일본은 냉전식 사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가와사키 아키라 / 피스보트 (Peace Boat) |
| 1:45 | 제3발표 | 천안함 사건 전후 남한의 군사안보전략과 시민의 우선순위
이태호 / 참여연대 |
| 2:00 | 제4발표 | 중국 정부의 위협인식과 시민의 우선순위
후와 한 / 베이징대학 |
| 2:15 | 종합토론 | |
| 3:40 | 휴식시간 | |

2부 아태지역 무장갈등 예방과 비핵군축을 위한 시민연대 방안

- 4:00 사회 이대훈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사) 평화박물관
- 4:05 제1발표 **아태지역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전략**
: 글로벌 관점에서의 동북아 지역 캠페인 셋팅
콜린 아처 / 국제평화센터(International Peace Bureau)
- 4:20 제2발표 **공동안보(Common Security)로서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전략**
유아사 이치로 / 피스데포(Peace Depot)
- 4:35 제3발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 동북아 지역의 평화, 화해, 협력을 추구하며**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4:50 제4발표 **한국평화운동 사례 : 평화군축박람회,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여옥 / 전쟁없는세상
- 5:05 종합토론
- 6:30 폐회

목차

참여연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평화와 법센터) 공동주최 토론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 방안

1부 아태지역 정부들의 안보전략과 시민의 우선순위

발제1	우방국의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전략 / 존 페퍼	7
발제2	일본은 냉전식 사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 가와사키 아키라	16
발제3	천안함 사건 전후 남한의 군사안보전략과 시민의 우선순위 / 이태호	25
발제4	중국 정부의 위협인식과 시민의 우선순위 / 후와 한	42

2부 아태지역 무장갈등 예방과 비핵군축을 위한 시민연대 방안

발제1	아태지역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전략 : 글로벌 관점에서의 동북아 지역 캠페인 셋팅 / 콜린 아처	45
발제2	공동안보(Common Security)로서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전략 / 유아사 이치로	56
발제3	동북아여성평화회의 : 동북아 지역의 평화, 화해, 협력을 추구하며 / 정경란	68
발제4	한국평화운동 사례 : 평화군축박람회,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 여옥	79
발제자 소개		85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 방안

1부
아태지역 정부들의 안보전략과
시민의 우선순위

우방국의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전략

존 페퍼 / 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아마도 미 국방부의 황금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시절의 엄청난 예산증가 규모는 줄어들었다. 국외 개입을 노리던 매우 야심찬 계획들도 축소되었다. 극도로 공격적이던 수사법은 기세가 꺾였다. 미국 경제가 아직도 경제위기로부터 헤어 나오지 못함으로써 미 국방부는 상대적으로 얌전해진(modesty) 시대에 접어들었다.

나는 “상대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어쨌든 2011년 미 국방부 예산 요구액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한 1,590억 달러를 포함해 7,120억 달러이다. 미 에너지부의 핵무기 비용처럼 다른 부처의 국방 관련 예산을 더하면 총 국방예산은 8,61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완화된”이라는 표현은 오바마 행정부의 다른 군사정책 측면에도 적용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종결했으며 이라크 철군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군대를 증파했고, 파키스탄에서는 무인 항공기 공격을 증가시켰고, 예멘과 북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대테러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수사적 기교에 있어 일방적 조치, 전면적 우세, 군사적 목적에 대한 공격적인 추진에 대한 언급을 대부분 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의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들은 부시 행정부가 9·11 사태 이후 도입했던 많은 원칙들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실수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인 관계로, 부분적

으로는 전임자보다 상당히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가 중동 및 중앙아시아에 매우 집중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미국이 사실상 중국에게 아시아 정책을 외주를 주었다는 자각이 워싱턴 정책관계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워싱턴은 테러리즘, 북한, 글로벌 경제이슈에 대해 중국과 협력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아시아를 선점한 미국의 장점을 이용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자신의 광범위한 대외정책 비전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힐러리 클린턴은 아시아 지역을 두 번이나 방문했으며, 이 외에도 수차례의 고위급 접촉이 있어 왔다. ‘카네기 연구소’의 더글라스 팔(Douglas Paal)은 “오바마 행정부 하에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권을 방어하고 증진시키는 게임으로 돌아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 새로워진 아시아에 대한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력한 군사태세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키나와 기지 재배치 문제에 대해 일본에 냉정한 자세를 취했으며,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기조로 대응했고, 대만과의 주요 무기거래를 마무리 지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임 행정부의 유산이다. 그러나 오바마 팀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의 천안함 침몰 이후 한반도 근해에서 해상훈련을 강화했는데,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는 총 20척의 군함, 200대의 항공기, 8,000명의 병력뿐만 아니라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도 투입하였다. 새로운 경제제재와 함께 매달 실시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평양의 숨통을 조이면서 동시에 워싱턴은 베이징에도 불을 지피고 있었다. 가장 최근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을 “국제화”하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사전에 10여국들의 지지 표명을 조직한 이러한 책략은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중국은 해당 분쟁을 양자간 이슈로 처리하길 원한다).

간헐적인 강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 중국을 “위협(threat)”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지정학적인 계산과 미국 군사 독트린에서의 미묘한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2010년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군사전략은 “떠오르는” 이슈보다는 당면한 분쟁 쪽으로, 전통적인 ‘2개의 전선 전략’보다는 동시다발 분쟁 쪽으로 이동했다. 미국방부는 15년 후의 가상의 적보다는 오히려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란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아직 상대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어쨌든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결국 아시아에서의 위상 축소가 아니라 자기 위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미 국방부는 자기 접시 위에 아주 많은 음식이 올려져 있지만 국내 여건들로

인해 그것들 전부를 차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배정받을 것이다. 이러한 특정 딜레마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에게 더욱 의존하는 것이다. 미국은 항상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상대적으로 덜하지만)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해왔다. 내뿜 상태일수록 워싱턴은 더욱 고통분담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조만간 자신의 동맹국들에게 단순히 추가 재원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갈수록 이들 동맹국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우방국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화하는 미 국방부의 전략

QDR은 지난 2월에 발표되었다. 또한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은 금년 말 발표될 예정이다. QDR에 깜짝 놀랄만한 내용은 없었으며, GPR도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로버트 게이츠가 이끄는 미 국방부는 전략 변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투명하다.

게이츠는 오랫동안 장기 목표보다는 단기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예를 들어, 언젠가 최고의 패권 지위를 노리며 미국에 도전하는 떠오르는 권력으로서의 중국이 아닌, 현시점에서의 중국을 상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QDR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는 다소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대잠수함 및 대미사일 방어에 대항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 공군과 해군은 최신예 폭격기, 신형 순항 미사일 및 항공모함에서 이륙가능 무인항공기와 같은 전력을 통합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 전력을 대폭 재조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접근법은 현 행정부가 직설적으로 중국을 하나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훨씬 많은 예산을 투여하길 원하는 의회 내 강경주의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미 의회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수석 의원 벅 맥켄(Buck McKeon, 캘리포니아주)은 “내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 핵심 국방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위협을 평가절하할 것이란 점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소수만의 우려가 아니다. 2010 QDR 발행 이후 전 부시 행정부 국가안보 보좌관 스티븐 해들리(Stephen

Hadley)와 전 클린턴 행정부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가 의장을 맡고 있는 해외 정책 전문가 양당 패널은 자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의 주요 권고사항은 강력한 미 해군을 위해 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함으로써 장기적인 상황과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에 대비하라는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환심을 사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해왔다. 그는 대만과의 주요 무기 거래를 통해 중국을 압박했지만 동시에 베이징과 군사 대화를 재개했으며 (중국은 대만과의 무기거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군사교류를 취소했었다), 여기에는 우주 협력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을 중재하는 동시에 중국 측에 C-130 수송기를 판매함으로써 21년에 걸친 무기 수출규제를 거둘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국 경제 성장을 유지하며, 러시아와 인도 그리고 심지어 이란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또한 중국도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맹국들에게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중국 국경지역의 수많은 잠재적 적대세력들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 주변으로 ‘느슨한 저지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그런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두 강대국은 이러한 장기적인 전략 비대칭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전술적 (이해관계의) 수렴(short-term tactical convergences)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이중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봉쇄와 “거부 전략(denial strategy)”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유일한 군사 목표이다. “아시아에서의 미국 방어태세는 지리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고, 작전상 탄력적이며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게이츠는 말했다. “분산된(dispersed)” 및 “유연한(resilient)”이라는 두 용어는 미 국방부 브리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다. 즉 미 국방부는 어느 한 지역에 묶여 있길 원하지 않으며, 지구상 어느 곳에서 발생하든 모든 우발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그들의 인계철선 기능을 철회했다. 이 모든 조치들은 미군이 더욱 유연해지고 한반도 밖에서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또한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해군 병력을 철수하고 (이 병력은 광으로 재배치될 것이다) 그 대신 규모는 작지만 더 유연하고 신속한 병력 배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지 건설에 대해 협상을 해왔다.

“협력”은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3번째로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다. 국방부 부차관보 제니 데이비스는 “QDR 이후 우리는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원할

경우 협력 및 맞춤형 접근에 대한 우리의 철학이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 지역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미 국방부는 "미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새로운 방안 그리고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말 자체는 모두 완곡한 어법이다. 하지만 이 "협력적" 접근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부정적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협력의 유해성

미국은 동맹국 일본을 제약하고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힘의 경쟁을 완화시킨다는 근거 하에 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을 어느 정도 합리화해 왔다. 이에 맞춰 일본은 공격적 군사력을 보유하기 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활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최근 수 년 동안 변화되었다.

어떤 학자가 "살라미 전술"이라고 부른 것처럼 일본은 '평화 헌법'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멀어지고 있다. 의회 및 국민투표에서의 2/3 찬성을 요하는 헌법개정 절차 대신 일본 강경주의자들은 군사 문제에 대한 헌법 적용에 있어 작지만 중요한 사항들을 손쉽게 변경했다. 이러한 대부분의 변경은 핵 잠수함의 일본 항구 정박, 영외 작전에서의 협력,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일본 군사태세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간과되는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규칙 완화를 필요로 했다. 물론 이것이 수출 정책에 있어 첫 번째 변화는 아니었다. 그 전에도 일본은 민군 겸용 가능한 이중 품목과 그것의 미국 수출을 면제했었다.

이러한 살라미 전술을 통해 금지규정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듦으로써, 일본 정부는 이제 수출 금지규정 전부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금지규정을 삭제하려는 논리는 의도적으로 점잖은 어구로 표현된다. 일본 정부는 단순히 다국적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한다. 일본의 신임 외무상인 세이지 마에하라(Seiji Machara)는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우수한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한데 모으는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경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지규정을 폐지하려는 진짜 이유는 일본이 최첨단 공격용 무기류를 보유하고 또한

그것들을 해외에 판매함으로써 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부족한 정부 재원을 이전하는 수고와 대중의 반발이라는 위험부담 없이 더 많은 재원을 국방 예산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아마도 더욱 중요하게는 일본의 자체 국방비 인상과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다양한 방산업에 대한 참여 확대라는 미국의 압력에도 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자국의 전선에서 빠듯한 재원을 갖고 있는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욱 많은 비용부담을 감수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일본 민주당은 취임과 함께 주일미군 지원 및 주둔지에 대한 과중한 비용(연간 40억 달러를 상회하는 직간접 지원 비용)을 포함하여,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미국은 일본에게 후텐마 해군 비행기지 폐쇄 및 8,000명의 해군 병력 광 재배치 보조, 오키나와 주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헤노코에 대체시설 건설 등 2006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러한 기지이전을 위해 더욱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이미 추정 비용 100억 달러 중 60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미국은 일본에게 예상되는 초과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추가 비용은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케이 베일리 허친슨(Kay Bailey Hutchinson, 공화당, 텍사스주)이 소란을 피워 여름 내내 미국 하원에서의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분담금을 증액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서명한 1991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직접경비 분담액을 1,073억 원에서 2008년에는 7,415억 원으로 증액시켰다”고 서재정은 서술하고 있다. “만약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이전비용과 다른 미군기지를 평택, 오산기지에 통합하는 비용을 추가한다면 한국의 전체 분담액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들은 2013년까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직접비용 분담 사례는 한국과 일본이 동맹국의 의무로서 부담해야 하는 국방비가 어떻게 증가될지를 보여주는 일례 일 뿐이며, 아마도 제일 미미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자국 군대가 미국 군대와 상호운용 가능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모두 반드시 상당한 군사기술 업그레이드를 수반해야 한다. 한국은 2007년에 거의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입했으며, 그 중 95퍼센트가 미국산이었다 (한국은 2008년에 10억 달러 규모 이상의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무기 수출 측면에서 일본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줬다). 또 하나는 대당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이지스 구축함 건조에 대한 한국의 투자 사례이다. 이러한 형식이 미국이 그동안 동맹국들에게 요구해 왔던 해상기지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한국은 적어도 2020년까지 당초 7~8 퍼센트의 예산 증액을 예상하고 자국 군대에 대한 적극적인 현대화를 추진해왔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러한 증액은 협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협력 부족의 결과였다. 한국 정부는 그 당시 미국이 점진적으로 동맹을 버리고 한국 자체적으로 고군분투하게 내버려둘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예산 부족과 워싱턴과의 관계개선으로 2009년 예산은 단지 3.6 퍼센트 밖에 증가하지 않을 정도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을 이유로 지난 5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다며 재래식 군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2,9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구성된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팀은 국방비 지출을 현재의 GDP 대비 2.76 퍼센트에서 3.5 퍼센트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을 권고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온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의 하향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함정에 빠진 것으로 여기든 혹은 방치된 것으로 여기든,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대응은 대체로 비슷했다. 지난 수년에 걸쳐 국방비를 계속 증액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자국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일본 내에는 그 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수준인 GDP 대비 1 퍼센트를 넘어 국방비를 높이려는 목소리가 있다. 일부 추정에 의하면 북한의 국방비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미국은 자체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관심한 채로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군사력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개입을 다시금 몰두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이 보다 많은 동맹비용을 부담하고 동맹국의 자체 군사력에 더욱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를 원한다. 어떤 경우든 한국과 일본에서의 국방비 증가는 미국의 국방예산 증가보다 더욱 강한 영향을 중국에 미칠 것이다. 결국 미국은 미 국방부의 예산 증액분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우려 지역에 투여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이 그렇게 주장하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다른 종류의 협력

미 국방부 분석가들은 현재 두 가지 상이한 군사 독트린의 우열을 가리고 있다. 일부는 테러 및 기타 비대칭 위협과의 전투에 초점을 맞춘 대테러전에 주력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른 일

부는 부상하는 중국, 회복된 러시아, 지역적 위협에 속하는 이란 등 대규모 대칭 위협과 전투를 벌이는 전통적인 ‘냉전’ 접근법을 선호한다. 2010년 QDR은 이들 두 부류 간의 절충을 피하고 있다. 게이트가 F-17 전투기 같은 일부 무기체계를 기꺼이 취소하고 현재의 분쟁사안에 초점을 맞추길 희망하는 것은 그가 기본적으로 대테러전에 기울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미래의 적에 대하여 재래식 전쟁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자금을 계속 투입할 것임을 보장하여 ‘냉전’ 무기체계 생산라인을 유지하려는 기득권도 존재한다.

당분간 미국 측 카드에는 진정으로 진보적인 대외정책은 들어 있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부터 국방비 과다 지출에 이르기까지 9·11 사태 이후 부시의 대외정책의 수많은 기초들을 유지해 왔다. 표현법에서의 약간의 진전, 미 국방비 증가율의 약간의 감소, 이라크전에서의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저 그런 약간의 변화일 뿐이며,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2년 기간 중에도 어떤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경제위기로 인해 미 국방부의 과도한 지출과 군사개입에 대해 추가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적자감축위원회(Deficit Commission)’는 12월 1일 보고서를 발행할 것이며, 일부 위원들은 군비 삭감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 내핍상태는 지상 작전에 자금을 재배정하기 위한 미 국방부의 간접비 축소와 동맹국들의 비용분담에 대한 압력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 유망한 대안은, 즉 아직 진정한 진보적 비전이 결여된 QDR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대안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일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미국령(괌, 하와이)에 위치한 기지 및 잠수함을 가지고 중국 및 북한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미 국방부에서 회람되고 있는 하나의 계획은 미국 해군 전력을 280척에서 250척으로 완만히 축소하고, 국방비 예산을 15 퍼센트 삭감하며, (현재 오키나와 기지를 괌으로 이전하는 현 계획을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기지들을 오세아니아로 재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시민운동을 통해 반드시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군비를 동결하고 축소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역 안보기구와 협력적 안보 메커니즘에 대한 제안과 결합된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협력은 우리의 “지평선을 넘어(over the horizon)” 전략을 대표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외균형에 대한 타협이 적절한 전술

일 수 있다. ☼

일본은 냉전식 사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가와사키 아키라 / 피스보트(Peace Boat)

서론

이 글은 먼저 일본 국방백서와 총리자문단의 최신 보고서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과 안보정책의 전반적 방향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의 최근 분석을 요약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러한 안보정책의 개발과 연관된 세계적 맥락을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동북아시아에 지속적인 평화 메커니즘을 창출해낼 일본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정책 전환을 제안할 것이다. 주요질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어떻게 냉전식 사고의 잔재를 극복할 것인가? 이 지역은 세계화와 전세계적 권력 이동과는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 일본은 어떻게 미국이나 일본의 패권적 군사력에 덜 의존하는 평화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2010 일본 국방백서

일본의 국방백서인 ‘2010 Defense of Japan’은 국제 안보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해졌으며 이는 1)최근 몇 년 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국가들의 증가 2)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3)국제테러조직과 기타 비정부 행위자들에 의한 활동 4)국제 테러리즘의 온상이 되고 있는 취약한 국가들의 위험성 등과 같은 요소들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시작한다.¹⁾

특히 세계적인 전략적 균형에 있어서 최근의 변화, 즉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이 성장하고

1) The full text of DefenseofJapan2010isavailableonline:http://www.mod.go.jp/e/publ/w_paper/2010.html

있는 신흥 강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쇠퇴를 강조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미래에는 군사 및 기타 영역에 있어서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쇠퇴할 것이지만,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되어 왔다....앞으로는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은 다극체제 지향적인 국가들의 국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²⁾

이어서 백서는 다음과 같은 “국제사회의 주요 안보 쟁점들”을 열거하고 있다:

-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운반 수단 뿐만 아니라 핵, 생체, 화학(NBC) 그리고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금지
- 세계적으로 흩어져있는 국제적, 지역적 테러집단 조직들
-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 “정보와 전자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급
- 지역갈등과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 최근 해적행위의 증가를 감안한 해양운송의 안전
- 대규모 재난과 전염병 발생

국방백서는 국제사회가 현재 “전통적인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유발사태”에 이르는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다고 요약하고 있다. 또한 군대의 역할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백서는 “외교, 경찰, 사법, 정보, 그리고 경제적 조치 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포함하는 통합된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라고 서술한다. 또한 군의 다양화한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안보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이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과 국가들간의 “증진된 조화와 협력”을 불러왔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과는 달리 냉전의 종식 이후에도 국가/지역 간의 갈등이 남아”있으며 “영토권과 통일에 관한 오래된 쟁점이 이 지역을 계속해서 골치거리가 될 것.”이라고 백서는 지적하고 있다.

2) Part I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Japan' - General Situation:

http://www.mod.go.jp/e/publ/w_paper/pdf/2010/04Part1_GeneralSituation.pdf

북한, 중국, 러시아

국방백서는 특별히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3개국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여전히 최고의 관심사이다. 백서는 “이는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현저한 위협이기에 받아들이 수 없다.”라고 말한다. 또한 백서는 2010년 3월에 있었던 한국의 천안함 침몰과 다양한 국제적 반응들을 언급했다. 백서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침몰에 대한 비판”으로서 한미연합군사훈련 뿐만 아니라 6월 G8정상회담 성명과 7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언급함으로써 일본이 한국정부에 동조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에 관해서는 “계속되는 국방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배경으로 하는 한층 더한 군사적 현대화”를 경고하고 있다. 또한 백서는 일본 근해상에서 중국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반면 백서는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활동의 “투명성 부족”을 “우려사항”으로 보고 있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투명성”을 요구하며 신뢰구축을 위해 “중국과의 대화와 교류 촉진”을 제안하고 있다.

백서는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한 재원으로 군사 태세를 진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군대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만 신형 무기 개발과 도입을 포함해 “군사를 현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백서는 최근 러시아군의 “전지구적 배치”에 따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도 “활발한 함정과 항공기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경고한다.

총리지문단 보고서

총리 자문단인 ‘새 시대 국방력위원회(the Council of Defense Capabilities in the New Era)’는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후 2010년 8월 “새 시대의 미래 국방력에 관한 일본의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간 나오토 총리에게 제출했다.³⁾ 시게오 사토가 의장을 맡고, 재계 지도자들과 안보 및 국제관계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자문단은 국방프로그램 지침(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개정에 관한 연구를 임무로 부여 받았다. 현재의 지침은 2004년 내각에 의해 채택되었다. 개정은 2009년 자민당(LDP)의 아소 다로 총리 하에서 계획된 것이다. 그러

3) The full text of the report is available, in Japanese only, at: Lists of members, activities and other information regarding the Council of Defense Capabilities in the New Era are available, in Japanese only, at : <http://www.kantei.go.jp/jp/singi/shin-ampoboue2010/>

나 그 이후, 민주당(DPJ)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프로세스는 일년간 연기되었다. 2010년 초,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안보정책에 관한 최초의 총리 자문기구로서 이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 자문단의 보고서는 세계 안보환경의 최근 경향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적했다. 1)초국적 도전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세계화 그리고 늘어난 “평시와 전시 간의 갈등” 2)미국의 영향력 쇠퇴에 반해 신흥 강국의 부상에 따른 힘의 균형의 이동 3)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체계로 인한 위험성 증가 4) 지역분쟁, 실패국가(failed states), 테러리즘과 초국가적 범죄들의 지속적인 위협

이러한 도전들에 대응하여, 이 보고서는 일본이 국제평화협력, 비전통적 안보와 인간안보와 같은 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화 창조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를 권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장하는 한편, 일본은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채택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강국들과 관계를 맺으며, 다자적 안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헌법 9조에 기반한 정책에 대한 도전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하나는 일본이 오랫동안 안보정책의 근거로 삼아왔던 ‘국방기본개념(The Basic Defense Force Concept)’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기본개념은 일미안보협정에 의존하는 것에 더하여, “적절한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침략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설명된다.⁴⁾ 이것은 일본이 헌법 9조 하에서 지켜온 “전수방위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같은 “정적인” 억제제는 오늘날의 안보 도전들에 맞설 수 없으며 적극적 감시와 경계로 평시에도 높은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는 “역동적” 억제가 점차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침략을 방어하는 데 맞춰진 개념을 고수하는 대신, “다기능적이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방어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권했다.

다른 하나는 이 보고서가 일본이 1960년대 후반 이래로 지켜온 무기수출금지원칙을 개정할 것을 분명하게 권고했다는 것이다.⁵⁾ 이 원칙은 1980년대 미국으로의 군사기술 이전과 더욱

4) Defense of Japan 2006 http://www.mod.go.jp/e/publ/w_paper/pdf/2006/2-2-1.pdf

최근에는 미사일방어 관련 대미 수출을 제외하기 위해 완화된 적이 있지만 이 원칙은 평화 헌법 하의 일본에게 있어서 독특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무기수출금지원칙의 근본적 개정을 위해 활발히 로비를 전개해온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⁶⁾ 이 보고서는 정부가 공식적인 국가 정책을 개정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다.⁷⁾ 그러나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무기수출정책의 “재검토와 재정립”을 위한 연구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이 자문단의 보고서는 오늘날의 안보의제에 대한 분석이나 취해져야 할 정책방향에 있어서 이전 자민당 정부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방기본개념에서 벗어나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군대를 지향하는 것은 이미 2004년 국방프로그램 지침 개정 의해 취해진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⁸⁾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변화는 안보 정책 전문가 그룹이나 “두뇌(brain)” 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중대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 외교 국방 부문의 전직 고위급 관료들 또한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국방정책 입안의 연속성은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것을 지키고, 새로운 것에 투자하기

오늘날 일본의 안보정책의 특징은 오래된 접근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접근법에 투자하는 것이다. 오래된 접근법은 본질적으로 주변 적국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침략을 막는다는 것으로 냉전시대에 형성되었다. 침략에 대한 방어적 접근은 오랫동안 일본 자위대(SDF)를 만드는 데 결정적 요인이었다. 실제로,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구조가 남아있는 지역으로, 한반도 분단과 양안갈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국방백서가 지적했듯이, 지역 통합이 이루어져 있고 사람들이 국내 분쟁과 폭력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5) Japan's Three Principles on Arms Export were declared in 1967 and strengthened in 1976. Se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ote at: <http://www.mofa.go.jp/policy/un/disarmament/policy/index.html>

6) Akira Kawasaki, 'Japan's military spending at a crossroads', Asian Perspective, Vol.33, No.4, 2009 <http://www.asianperspective.org/articles/v33n4-f.pdf>

7) Masami Ito, 'Relax arms export ban so firms can profit: panel', The Japan Times, August 28, 2010 <http://search.japantimes.co.jp/print/nr20100828a5.html>

8) Defense of Japan 2006
Also refer to Akira Kawasaki, 'The critical juncture of Japan's defense policy vis-a-vis the U.S. strategy', Japonica Review, No. 1, 2006

“유럽과 달리,” 일본과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게는 국가 대 국가 사이의 긴장이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일본과 중국, 러시아 간의 영토분쟁에 관한 자극적인 뉴스들은 이 지역이 여전히 냉전의 분열 속에 갇혀있음을 상기시킨다.

일미안보협정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토대로 보인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일본의 안보논의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평계거리로 이용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후텐마 공군기지를 헤노코로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2006년 협정을 재논의함으로써,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에 차별성을 보이려 했다. 그러나 그는 일미동맹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일미 양측 안보전문가들의 맹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그는 대중의 지지를 얻을만한 계획을 보여줄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키나와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재검토를 그 만두게끔 그는 코너에 몰렸다.

핵무기와 관련해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이 전세계 핵군축에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동안 일본은 핵무기에 의해 보호받을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이러한 프로세스를 늦추고 있다.⁹⁾ 최근 국제적 논쟁은 민주당 정부가 핵무기의 선제공격 포기 정책(no-first use policy of nuclear weapons)의 채택이나 미국의 핵정책 계획 중 토마호크 미사일 철수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¹⁰⁾ 민주당 정부는 2010년 3월 냉전시대 핵무기 탑재 군함의 통과에 대한 일미비밀협정을 공개했는데 이는 당시 외무상 오카다 가쓰야에 의해 주도되었다. 민주당은 또한 일본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철수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는데, 이는 2010년 4월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리더십은 “신뢰할 만한” 확장 억제력을 위해 미국에 의한 핵무기 선제사용이 필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전통적 정책을 변화시킬 만큼 강하지 않다.

군의 새로운 역할

이와 같은 냉전식 사고가 일본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전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9) Akira Kawasaki,

‘Japan should end reliance on U.S. nuke umbrell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The Asahi Shimbun, October 10-11, 2009

10) Masa Takubo, ‘The role of nuclear weapons:

Japan, the U.S. and the “sole purpose”’, Arms Control Today, November 2009 http://www.armscontrol.org/act/2009_11/Takubo

새로운 변화 역시 생겨나고 있다. 우선 비정부 행위자들과 연관된 지역갈등이나 테러리즘의 증가 등은 일본의 안보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냉전의 상자에서 벗어나 새롭게 사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유연하고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군대, 그리고 평시의 작전들과 민간협력을 포함하는 군의 다양한 역할들은 국방백서와 위의 전문가 보고서에서 서술된 유사한 경향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국방 관료들이 점점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들을 중요한 안보위협이자 자위대가 잘 대비되어야 할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2010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군의 증가된 역할을 거론하는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다.¹¹⁾ 이것이 국가 대 국가의 전쟁 가능성이 감소하면서 군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모색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냉소적인 질문은 차치하고라도, 경제 사회적 세계화에 뒤이어 국경을 넘어 군사력이 통합되는 명백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시와 평시, 그리고 한 국가의 군대와 국제군 사이의 군사활동의 구분도 흐릿해졌다.

신냉전?

둘째로,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은 모두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부상을 감안한 세력 균형의 이동이나 미국의 영향력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G8에서 G20에 이르는 세계 경제 지배의 이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외부성과 방위성은 먼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한국, 호주, 그리고 인도와의 강화된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중국을 둘러싼 일본-한국-호주-인도의 “자유민주주의적 띠”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을 봉쇄하는 위험성 혹은 중국에 의해 그와 같이 해석될 위험이 있다. 이것이 새로운 냉전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와의 핵협력을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찬성론자들은 종종 핵협력을 통해 인도를 부채질함으로써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언급한다.¹²⁾ 정부는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더욱 확장된 대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ASEAN 지역포럼, ASEAN+3 그리고 기타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협력체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하는 지역안보 메커니즘을 창출하기 위한 이 같은 논의들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목소리

11) Roxana Tiron, 'Pentagon to review climate change for the first time,'

TheHill, January 30, 2010 <http://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78855-pentagon-review-to-address-climate-change-for-the-first-time>

12)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India formally started negotiations for a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in June 2010.

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은 강력하지 않다.

2010년은 일미안보협정이 50주년을 맞는 해이다.¹³⁾ 양국 정부는 이 역사적인 시기에 안보협정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어떻게 두 정부가 안보협정의 “심화”를 정의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그러나 위의 주장들이 논의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제언 : 역내 안보논의의 전환

미일 정부가 일미 안보관계를 “강화하겠다(strengthening)”는 말을 대신 “심화하겠다(deepening)”를 택했다는 것은 시민사회가 개입할 길을 열어 준 것이고 할 수 있다. 비판적 관점에서 시민사회는 역내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면서 미일 안보관계를 재정의하는 과정에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냉전이 형성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대신 동아시아 평화 커뮤니티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낡은 냉전의 배경 아래 중국과 새로운 긴장을 유발하는 것은 건설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장기간 경제침체에 영향을 받은 일본 사람들이 중국 경제의 부상에 대해 갖는 라이벌 의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한 광범위하고 더 깊은 개입이 추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민주당 정부의 동아시아 커뮤니티 의제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뢰구축, 군비 통제, 군축 메커니즘의 형성 등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것처럼 항구적 지역 메커니즘의 형성을 향한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6자회담 개최도 촉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핵군축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 같은데, 냉전의 일환인 핵억지력에 대한 일본의 집착은 세계 핵군축 과정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의 미래에 건설적이지 않다. 일미안보협정의 “심화”는 양자안보협정에 포함된 핵 관련 부분은 전부 다 폐기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상당히 축소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군축의 과정을 밟아가도록 촉구하는데 건설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북아 비

13) Refer to the Joint Statement of the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Mark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U.S.-Japan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January 19, 2010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joint1001.html>

핵지대는 역내 공동의 정책목표여야 한다. 일본은 핵무기의 고통과 파괴를 경험한 국가로써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한다.

세 번째는 경제의 군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사와 민간의 차이는 전장(field operation)과 산업에서 모두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무기 수출 금지를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들은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는 것이 일본 경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미국, 유럽 기업들과 함께 첨단 민군겸용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본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에 반대하는 도덕적 주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일본의 전후 “번영”은 부분적으로 평화헌법의 일환으로 군사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발전 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번영”은 또한 일본을 떠나 한국전쟁과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고통 받은 사람들의 희생에 기반한 것도 진실이다.) 하지만 일본 전체 경제에서 군사부분이 차지하는 매우 작은 비율과 증동이나 다른 세계로부터 “평화국가”로서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 등을 고려해 이러한 군사편중이 정말로 일본 경제에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절대 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시민사회는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범죄, 해적, 유행병, 재난, 기후변화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다. 국제적 위협들이 점점 줄어들고 군사력을 지향하는 것이 점점 완화되는 반면 사회경제와의 관련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는 이제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혁신적인 시민사회의 접근법이 개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군사력 업그레이드와 막대한 군비 지출 유지를 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추가적인 핑계들을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세계화는 세계적 빈곤과 폭력이라는 심각한 위협을 낳고 있기 때문에 냉전의 잔재를 지속시키려는 어떠한 핑계도 추가되어서는 안된다. 동아시아는 세계 공통의 이해에 기여하는 데 동아시아의 발전된 경제와 재원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

천안함 사건 전후 남한의 군사안보전략과 시민의 우선순위

이태호 / 참여연대

1. 들어가며

최근 남한의 군사전략이나 군비 확장은 ‘힘 없으면 당한다’는 역사적 현실주의의 맥락에서 이해될 만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다. 남한의 군사전략은 지난 수 년간 방어적 수준을 넘어 점점 공격적인 성격을 강화해 왔다. 특히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그 공격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남한 군사안보전략의 특징은 북한 위협에 대한 확대해석과 군사대응계획의 공격성 강화, 한미동맹의 배타성 강화, 기여외교를 빙자한 군사개입의 확대, 그리고 핵정책에서의 이중성 강화, 수출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동맹국인 미국의 패권적인 세계 군사전략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모방도 발견된다.

2. 천안함 사건 이후의 한반도 군사 긴장

지난 3월 26일 서해 NLL 부근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은 아직 사실의 영역이 아닌 추론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정부와 국방부는 이 사건을 북한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지고 갔지만 북한을 그 원인제공자로 지목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변하지 않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성과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을 보여주는 근거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형성

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7월 한미가 동해와 서해상에서 핵항공모함까지 포함한 무력시위 성격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이후 10월 PSI 훈련까지 총 4차례의 합동 군사훈련이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되었다. 그런데 천안함 사고 이후 한미가 공공연히 시위하는 군사계획들은, 북한 유사사태 대비 상륙작전, 북한 최고위 지도부 생포 계획 같은 매우 공격적인 것이다. 이같은 접근은 새로운 군사적 갈등의 부메랑을 불러오고 있다.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물론, 중국도 예전과 달리 매우 분명하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8월 한미 서해 군사훈련 당시 중국은 실탄 포사격 훈련으로 맞대응했다.

한편, 남한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지지를 계기로 한미 군사동맹은 전에 없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은 미세한 균열 조짐을 보이는 미일동맹을 자극하고 추동하는 보완재로도 작동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은 일본 민주당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공약을 변경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도 강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7월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해상훈련에서는 일본의 자위대 장교 4명이 참관했다.

천안함 사건은 한미 간에 묵은 이견들을 일괄 타결하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일정을 2105년으로 연기하자는 남한 측의 요청을 미국이 '수락'하는 대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전용기간 연장, 한미 FTA협상 '재조정', 아프간 파병과 이란에 대한 제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반대급부로 보상받고 있다. 다만, 미국 측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안보공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고 있다.

천안함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10월의 제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한미군사동맹의 공세적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1) 북의 '불안정한 사태'를 한미 공동성명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태세를 공고화하기로 하였고 2)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의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3) 한미동맹을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한미연례안보협의

회 직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MD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

천안함 이후 한미관계는 냉전해소 이래 군사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과 중국 관계 역시 그 역의 방향에서 전통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밀착되고 있다. 반면, 한중관계는 관계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6자회담의 재개와 같은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의 한반도 동북아 군사상황은 냉전시대의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

3. 이른바 ‘북한의 비대칭 위협’ 과 남한의 공격적 군비증강

천안함 사건 이후인 5월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9월 대통령에게 4가지 방향의 개선안을 보고하였다. △한반도 방어 전략을 소극적 방위전략(적의 공격이 있을 뒤 반격)에서 능동적 억제전략(적의 공격징후 파악, 공격 가시화 전 조치)로, △군전력 운용을 각군 중심, 현역 중심에서 합동성 강화,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군전력 증강 우선순위를 잠재적 위협 대비 첨단전력증강에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현존위협 대비 전력증강과 병행하는 것으로 △적정수준의 군병력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22개월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구 분	‘07예산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안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계	244,972	8.8	266,490	8.8	285,326	7.1	295,627	3.6	312,795	5.8
경상운영비	178,165	6.7	189,677	6.5	199,179	5.0	204,597	2.7	216,182	5.6
방위력개선비	66,807	15.0	76,813	15.0	86,147	12.2	91,030	5.7	96,613	6.1

2011년, 정부는 국방예산 31.3조 원(약 285억 달러, 환율 1100원 기준)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8% 이상된 예산안으로 2011년도 예상 성장률 5.0%를 상회한다. 국방예산이 30조 원을 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협력적 자주국방론에 의해 대폭 상승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집권 이래 다소 둔화되었던 국방비 증가율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타게 되었다.

2011년 예산안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침투·국지도발 대비전력 보강과 비대칭위협 대비 방어능력 향상이다.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특히 강조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에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국방부가 북의 비대칭 위협을 내세워 군비확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잃은 것이다.

비대칭 위협은 통상 군사적으로 혹은 군사비에서 열세에 있는 상대가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해 전체가 아닌 일부 분야에서 비대칭적인 수준으로 군사적 타격을 가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비대칭적 위협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군비지출이 북에 비해 상당히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연합군의 훈련내용이 주로 북한 정권 붕괴 혹은 국지전 이후의 북한 점령을 가정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국방부가 북의 국지도발 위협, 비대칭 위협이 문제라고 판단하였다면, 그것은 다른 위협 즉 전면전 위협이나 이를 위한 북의 군사적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포함하는 것인 만큼 전면전 대비 전력은 축소되어야 마땅하다. 예컨대, 현재의 과도한 육군 병력, 장교 수, 과도한 기갑장비,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해공군력 분야에서 군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예산안은 대북억지전략에서 공격성을 더하고,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는 첨단전력 형성과 병행하여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대비할 전략도 함께 증강하며,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존의 대군주의(육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자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자문결과가 공식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1년 예산안은 점검회의의 권고사항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2011년 국방예산은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 투자를 내세워 군이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모든 첨단군사전력 소요(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 차기유도무기, F-15K 2차, FA-50, 차세대 전투기사업-보라매 사업, 이지스함 광개토-III,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UAV 등)를 아무런 삭감이나 조정 없이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군구조개편 소요반영' 혹은 '현존전력의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육군중심의 전력투자, 기갑화(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K1A1전차 도입 등) 추진을 지속함으로써 이미 과잉투자된 전면전 대비 전력에 대한 추가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4. 남북한 군사력의 실재와 대북 급변사태 계획

남한이 이미 북한보다 국방비와 군사전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SIPRI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는 2008년 환율기준으로 1990년에 137억 6천2백만 달러에서 2009년 271억 천3백만 달러로 197% 증가했다. 대테러 전쟁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비가 동 기간 131%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66%나 증가한 것이다.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국방비 누계는 남한이 약 2000억달러, 북한이 약 215억 달러로, 남한이 9배 이상 지출하였다. 2009년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총 GDP 278억 달러에 육박한다. 2011년 남한의 국방예산은 북한의 GDP규모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 2007년 현재 남한의 국민총소득(GNI)는 북한의 36배 이상이다.

2009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하고도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 가량 우세하며 주한미군 포함하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남한 정부가 북한보다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지 않다고 평가한 것은 이 조사결과가 최초이지만, 이조차도 북한에게 매우 후한평가라는 점을 군이나 정부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남한정부의 대북군사전략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1991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1996년까지 자주적 대북 방어 전략을 형성하고 1997년 이후 2006년까지 자주적 대북 억지 전략, 특히 2002년 이후에는 전략적 보복능력을 갖춘 공세전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입안되어 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소극적 방어 전략에서 능동적 억제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국방부가 이미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추구해왔고 또 현실화해온 것이다.

<표> Target Goals for Long Term Military Capability Establishment

stage	1987-1991	1992-1996	1997-2001	2002-2006
Objective	Securing Defence Capability against N.K.	Establish the Foundation of Deterrence Capability against N.K.	Securing Deterrence Capability against N.K	Securing Offensive Capability against N.K.
	Secure self-reliant defense capability		Secure self-reliant deterrence capability	
Target Goals	- Land Army: defence capability	- Establish core offensive capability	- Expand retaliatory function	- Establish strategic retaliatory capability

	(mobile deployment, Army air corps) - Navy & Air Force: core capability (destroyer, F-16) - Build the foundation for tactical early warning system	- Secure retaliatory function capability (F-X, submarine, land-to-land guided missile) - Establish tactical early warning system	capability (submarine, F-15, land-to-land guided missile) - Secure early warning system	(strategic naval vessel, long distance land-to-land guided missile) - Establish independent strategic early warning system
--	--	---	--	---

<출처> Medium Term National Defence Plan, 1991-1996 (1991)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남한 군사전략의 공격성은 크게 강화되었다.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10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미양국은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개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개념계획 5029를 사실상의 작전계획 수준으로 보완한 것이다.

양국의 대북 군사계획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거치면서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하달한 '전략기획지침(SPG)'에 의해 새롭게 구체화될 작전계획(이른바 작계 5015)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간 한미연합사 등이 부분적으로 언급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계획은 기존의 작전계획 5026, 5027을 융합하고 보완한 것으로, 전면전 등의 직접적인 무력 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사시' 휴전선을 넘어 북한지도부를 체포하거나, 북 군사 행정 기구들을 접수하고 북한에 대한 안정화작전을 진행하는 등의 직접적인 군사적 점령계획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2010년 3월에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는 미군 대량살상무기 제거팀이 참여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반환되는 것을 전제로(혹은 반환되는 것이 유보되더라도)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은 안정화작전을 주도하고 WMD 제거 등은 미국이 직접 단속하겠다는 구상을 훈련한 것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역시 과거에는 정규전을 대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지휘소훈련(CPX)이 중심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천안함 사태를 반영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잠수함(정), 특수전 전력 등 비대칭 도발위협과 북방한계선(NLL) 및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국지도발 등 현실적인 도발유형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위기관리연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코드명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된 또 다른 급변사태 계획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을 비상통치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남한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40여 만 명이 동원되어 훈련한 것도 이와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계획들은 ‘방어’에 목적을 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는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매우 공격적인 것이다. 더구나 이 구상은 부시 행정부의 침략적인 불량국가재건론을 연상시킨다.

새로운 군사계획들에 적용되는 ‘전략적 보복능력’ 확보, 혹은 ‘능동적 억지전략’ 구사 같은 개념은 사실상 북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아군 측은 완벽하게 방어하고 상대측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격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 우위란 있을 수 없다. 절대억지를 목표로 한 군사계획은 북의 군부를 좌절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불안감을 고취시켜 또 다른 비대칭 전력, 즉 보다 비정규적이고 파괴적인 전력 개발에 몰두하게 하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개선, 그리고 새로운 게릴라전술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전형적인 안보딜레마가 발생해온 것이다.

최근 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치가 약화된 조건에서 한미가 발전시키는 공격적 계획들의 위험성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NLL은 취약지역이다. 주지하듯이 남북간 경계가 모호한 서해 NLL 지역에서는 남북간 함정간의 무장갈등이 반복되어 왔다. 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정상회담에서 이 지역을 서해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정권 교체 후 이명박 정부는 기존 남북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그 결과, 서해에서의 충돌을 완충할만한 장치들이 무력화되었고, 최소한의 군사통신선도 2009년 5월 이래 두절되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NLL지역의 불안정성과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한미간 공격적 군사계획이 연결될 경우, 새로운 지역 무장갈등을 촉발할 발화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한미군사동맹의 지역화, 세계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2008년 4월 첫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한미동맹을 최근 변화된 국제 정세와 안보 수요에 맞게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바마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고, 2010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발표된 한미국방장관 성명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되

었다. 한미동맹이 지역화 세계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9년 하반기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 400여명을 ISAF 소속의 PRT(지역재건팀)로 재파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군은 이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었다가 철군한 바 있다. 한국은 이라크에도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파병한 바 있다. PRT는 재건을 내세우면서 점령을 정당화하고, 원조를 군사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라비아해 대테러 연합군에도 파병하고 있다. 2009년, 한국군 구축함 한 척이며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CFMCC: Combined Forces Maritime Component Command)에 합류하기 위해 예멘의 아덴만으로 파병되었다. 청해(Blue Sea)부대라고 명명된 이 부대 파병의 공식적인 목적은 해적 차단 및 테러 방지 등의 해양안보작전(MSO: Maritime Security Operation)을 수행하는 것이다. CFMCC는 9/11 직후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 남한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 기여를 내걸고 PKO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PKO 파병절차를 간소화하고 PKO전담부대를 신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 제정 이후 국방부는 PKO 전담부대만이 아니라 해외파견 전담부대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PKO 전담부대는 해외파견 전담부대의 일부가 될 예정이다. 모든 파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을 실전에서 훈련시킬 수 있다는 논리도 파병전담부대 운용의 주된 근거로 인용된다.

한국군은 레바논에 이어 아이티 같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지역에 주로 PKO를 파견하고 있다. 또한 한국군은 해외분쟁지역 안정화 작전 훈련, PKO 훈련 등을 명분으로 태국에서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미동맹 국가(Japan, the Republic of Korea,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들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상륙훈련인 코브라 골드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훈련은 재난구조, 인도지원 등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화작전 훈련이다.

한편, 국방부와 해군은 해양 수송로 확보 등 해양안보를 명분으로 한반도 서남쪽 제주도에 거대한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 해군기지는 해군이 '대양해군'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자랑하는 해군 제 7기동전단의 모항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2010년 초 구성된 해군 제 7기동전단에는 최신예 이지스함과 6척의 구축함, 그리고 준항공모함 수준의 수송함과 잠수함 전력 이 포함된다. 2012년까지 1대의 이지스구축함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해군에 따르면 이 전

단은 원유수입과 수출운송로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양해군’의 개념적 의미는 제해권을 가진 해군이라는 뜻이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제해권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상 미중간의 지역패권 경쟁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제주해군기지에는 한국 기동전단 외에도 미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MD장비를 탑재한 함정들도 기항할 것이다. 중국은 이 기지 건설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군의 이 같은 해외파병, 원거리 투사 양상을 고려할 때, 세계분쟁에 직접 차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사실상, 주한미군이 뿐만 아니라 한미군사동맹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약화되어가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 더욱 동맹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국군이 미군과 더불어 원양과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경향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자국민들을 패권경쟁과 무장 갈등에 연루시키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방위범위는 양국 영토에 대한 태평양지역에서의 위협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 이상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한미간의 군사적 협력, 군함과 군대의 해외파견과 이를 위한 군사기지의 전진 배치 등은 이 조약의 방어목적에 위배된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 5조의 평화조항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6. 무기의 수출, 군대의 수출

경제위기와 정부주도 대형 토목사업, 그리고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에 부담을 느낀 이명박 정부는 국방분야의 부패와 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방비의 거품을 제거하기를 원했다. 이미 과잉중복투자 상태에 있는 한국 방위산업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제공되어온 각종 특혜에 안주해온 결과 운영이 방만하거나 부실하고, 이들이 개발한 국산무기들에서 잦은 고장과 부품결함, 그리고 기대 이하의 수출실적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전략’ 보고서에서 방위산업을 내수에서 수출로,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한

국을 7대 방위산업 수출국가로 만들자는 취지의 국방산업 선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방위산업 연간 생산 100억 달러, 연간 수출 40억 달러를 달성하고, 방위산업 수출기업 10개가 세계 100위 안에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위산업을 수출주력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과잉중복투자로 인해 부실화한 방위산업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가가 나서서 미래성장동력 혹은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주장은 지난 30년간 관성적으로 반복되어온 것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이번 방안은 CEO 대통령이 주문한 구상답게 훨씬 경제적인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첨단무기를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허황된 구상 대신, 핵심기술에 한해서만 국가주도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되, 필요한 장비는 국산개발에 연연하지 않고 해외직구매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일반무기 분야는 첨단성능 발휘에 치중하기보다 가격경쟁력과 기본성능개선에 주력하도록 하고, 생산업체를 민영화 대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출시장에서 성공하도록 측면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써 미래기획위원회는 “미국이나 중동에 치우친 방위산업 수출시장을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늘려 방산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무기수출 증진을 위해 무기 수입국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 같은 대통령과 정부의 사고방식은 이미 2009년 아랍 에미리트 원전 수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009년 이 대통령은 아랍 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을 직접 주도하면서, 아랍 에미리트 세습왕조가 이끄는 군병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원전건설 보호 등의 명목으로 한국 군대를 파병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2010년 11월 특전사로 구성된 150명의 교육훈련 병력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비분쟁지역 파병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약하자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싸고 튼튼한 재래식 무기들을 세계 곳곳의 분쟁현장에 ‘맞춤형’으로 수출하겠다는 것. 무기수출이나 무역대상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위해 해당 국가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게다가 정부는 이 방안이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발상이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고려가 있었는지 알려진 바 없다. 한국은 이미 국제적으로 비인도적 무기로 지탄받고 있는 집속탄의 주요 생산 수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대인지뢰금지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들 비인도적 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소형무기들은 분쟁현장에서 첨단무기 이상의 심각한 파괴와 민간인 피해를 유발한다. 이것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저개발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성장 지원을 주요의제 중 하나로 제안한 한국정부의 정

책이라는 것이 놀랍다. 경제적인 실리를 위해, 그리고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가가 징집된 군대를 동원하거나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다.

7. 핵 정책에서의 이중성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6자회담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는 천안함 책임추궁하거나 급변사태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전략적 인내’의 기조가 강화되었다. ‘선택폐기’라는 기존의 우선순위마저도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최근 대북쌀지원과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조심스럽게 재개되고 있지만, 남한 정부가 북의 불안정성과 호전성을 강조해온 스스로의 탓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 vs 북중간에 형성된 군사적 불신과 갈등의 고리가 여전히 깊어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미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과의 불확실하고 어려운 협상보다 당장 한국과의 밀월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북한이나 중국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미 2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여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는 것도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큰 부담이다. 지난 4월 21일 발표된 북한의 비망록은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과 핵 실험 이후 북한이 원하는 협상 조건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핵심은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비핵국가를 공격하지 않고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북한의 이런 태도로 인해 북한은 애초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었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듯하다.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건 아니건 간에, 북을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협상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주장을 제외하면, 북한의 비망록이 제시하고 있는 논리들을 반박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실제로, 그간 한미일이 구사해온 일방적이고 이중적인 핵정책이 북의 ‘핵억지력’ 추구에 명분을 제공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큰 맥락에서 1990년대에는 정부와 시민들은 국제관계의 개선과 화해를 추구했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남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했다. 2002년까지는 남한과 북한,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이 관계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0년 북미코뮤니케, 2002년 북일정상회담이 그것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이 합의를 깨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핵공격 구상을 공표하면서 관계개선 대신에 군사적 억지의 논리, 핵억지의 논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그 후 6자회담이 시작되어 주요 합의사항인 9.19 공동성명(2005)과 2.13 합의(2007)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이 합의가 무력화된 것에도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9.19 성명 직후 미국이 대북제재조치(BDA 북한자금 동결(2005. 9))를 취한 것, 2008년 북한이 핵불능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김정일 건강이상설을 공개적으로 한미일이 대북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 등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현재 남한 정부는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의 불능화를 촉구하면서도 스스로는 핵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여 핵순환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인도와의 원자력 협정 추진에 합의하였다. 인도는 NPT 미가입 핵보유국이다. 또한 남한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엔 안보리 결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이란 독자제재를 강행 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의 관련 조항과 그 시행령에 대한 무리한 해석으로 논란을 빚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도 취한 바 없다. 핵에 대한 이 같은 이중기준은 북핵문제 해법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한일 핵군축의원연맹 PNND 의원들이 공동성명에서 정당하게 지적했듯이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은 또 다른 핵위협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핵억지에 의존하는 전략을 폐기할 준비가 안 된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북한보다 더 우월한 군사력을 갖춘 한미일을 포함한 주변국 모두이기도 했다. 핵우산 정책은 북이 핵을 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던 것이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정부는 아직도 핵우산과 북한의 핵폐기가 교환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한미일의 핵억지력에 대한 의존과 이중적 핵정책을 정당화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과장된 공포, 불신, 이중기준, 무시와 압박 등으로 이루어진 실패한 전략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전에는 한 번도 선택되지 않았던 보다 적극적이고 상호적

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6자회담은 북핵 폐기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한반도 평화체제 비전, 재래식 군비통제 방안, 동북아시아에서의 핵 위협 제거 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동북아비핵지대화는 북핵문제에 국한된 6자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할 하나의 대안이다. ☼

■ 참고자료.

누가 ‘위협’을 해석하는가?
누가 ‘안전’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가?¹⁴⁾

이태호

오늘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종식시킬 방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군비를 줄여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부들은 안보를 위해서 적정수준의 군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위협을 누가 정의하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그 적정량을 누가 정의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위협에 대해 정의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조작된 공포가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공동체를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 전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비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로 그만한 위협이 있는가? 둘째, 만약 어느 정도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수단이나 군사적 대비에 의해서만 해결될 성질의 것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과장된 공포와 군사적 수단에 대한 의존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14) ‘동북아시아 군비지출과 퍼시픽 프리즈 Pacific Freeze 캠페인’ (2009. 5. 3. 오후7시-9시, 뉴욕 콜롬비아대학 켄트홀 403호) 발제문

이라크 전쟁 전 후세인이 악마화되었던 것처럼, 북한이나 이란이 악마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독재자로 인식되는 것이지요. 특히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례나 어겼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세우고 핵을 실험하기 한참 전에도 한국에는 1000여기의 핵무기가 이미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 doktrin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속이행 문제도 그렇습니다. 큰 맥락에서 냉전 이후의 동북아시아를 보면, 80년대 말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분단 남한과 중국, 러시아는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2002년까지 이르는 좀 긴 기간 동안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기로 포괄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공동 코뮈니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깬 것은 누구입니까?

북미 공동 코뮈니케는 부시 정부가 깬습니다. 북일 정상간의 합의도 이행이 지연되고 있지요. 과거청산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과거청산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대한 북한의 과거청산문제였지요. 우리가 보기에 이 쟁점은 일본내부의 정치적 이유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거나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한국이 2001년 한 대당 1억 달러에 이르는 F-15전투기를 40대 구입했습니다.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그 때 국방부는 일본에 맞서 독도(다케시마)를 지키려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첨단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인데 정말로 일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냐고요. 그제서야 국방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국방부는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는 홍보논리를 폈습니다.

사실 F-15는 북한을 공격하기에는 충분한 무기이지만 동시에 구형기종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프랑스 혹은 유럽연합의 첨단기종 대신 F-15를 샀습니다. 왜냐고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보잉사의 F-15 생산라인이 문을 닫는 것을 연장하기 위해 F-15를 팔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정부는 일본의 위협이라는 공포를 조장해서, 보잉사의 무기를 팔아주기 위해 F-15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북한 선제공격용으로 실전배치했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F-15급 무기를 살 수도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죠. 북한이 값비싼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싸고 파괴력 있는 무기에 의존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내세워 값비싼 MD무기, 첨단 정밀타격 무기를 사들입니다. 핵우산과 핵선제공격 옵션도 유지하구요.

제주도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해와 대만이 가까운 제주도에 대규모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핵잠수함도 드나들게 될 이 대규모 해군기지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국방부의 설명을 좀 극단적으로 요약하면 ‘해적으로부터 원유수송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작 그것 때문이라고 물으면, 국방부는 장래 중국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립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제주도에 미군의 MD 장비가 드나들게 되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중국으로부터의 위협도 현실화될 겁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 논지를 정리하고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에 의해 과장되는 위협, 조작된 공포와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큼니다. 이것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합니다. 각 나라가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위협해석과 안보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많은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 문제에 대해 주권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소위 안보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라크를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발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군사적 수단 대신 외교적 수단, 적대관계 대신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식이 국경 안에 갇혀 있으면 도리어 더 편협해지고 더 군사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양 속담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는 뜻이죠. 국경을 넘어서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 얘기하는 Pacific Freeze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셋째, 평화의 선제행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80년대 말에 일어난 냉전 해소 이후에 아시

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군비경쟁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 집니다. 넓은 의미에서 90년대는 관계개선과 화해를 위한 모색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첫 10년간, 특히 부시 행정부 이후에는 이 지역에 무장갈등과 군비경쟁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위산업, War profiteer 들의 활동도 극대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 동맹국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은 이들 책임 있는 나라들의 시민들이 평화의 선제공격 전략을 짜야 합니다.

선제적 군비축소는 필요하고 또 가능합니다. 시민단체들이 군비축소를 얘기하면 소위 전문가들은 이상적인 얘기라고 일축합니다. 그들은 신뢰구축이 우선이고 군비통제가 그 다음이고 마지막으로 비로소 군비축소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물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안보전문가들이 고안해낸 그런 순서대로 군비축소가 일어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제안을 말씀 드리면,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내걸지 않고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군비축소를 직접적이고 시급한 목표로 하는 운동이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pacific freeze운동의 전략이자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과연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Pacific Freeze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위협해석과 군비정책에 도전하는 시민의 대안적 정세인식과 대안적 평화전략을 제시하는 노력이 정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간하는 QDR, 방위백서, 국방백서에 대해 시민의 평화백서가 정기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한 첫 작업으로 한국전쟁 60년을 맞는 한국에서 올해 10월, 우리의 아시아 태평양 각 나라 시민운동이 생각하는 대안적 인식과 전략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워크숍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발제 4

중국 정부의 위협인식과 시민의 우선순위

후와 한 / 베이징대학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 방안

2부
**아태지역 무장갈등 예방과
비핵군축을 위한 시민연대 방안**

아태지역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전략 : 글로벌 관점에서의 동북아 지역 캠페인 셋팅

콜린 아처 / 국제평화센터(International Peace Bureau)

이번 국제워크숍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래서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 국제사회 상황에 비춰 아태지역에서의 군사화 반대 운동에 대한 발제를 요청받았다. 우선 나를 비롯해 국제평화센터(IPB, International Peace Bureau)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자기소개

나는 197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와 인권 활동가로서 활동해 왔는데 이것은 정치에 대해 배우기에 좋은 시기였다. 대학시절 나는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에서 일 년 동안 일을 했고, 그 후 7년 동안 잉글랜드 북부지역에 소재한 제3세계 센터(Third World Centre)를 이끌며 개발 교육과 남북 연대활동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 후 10년 동안 성인 대상 교육에 종사했다. 1980년대 후반 영국에서 핵군축 캠페인과 법과 평화연구소에 관여하며 특히 핵문제 관련 활동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경험은 1990년대 IPB 사무총장에 임명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그 후 나는 핵군축, Hague Appeal for Peace(1999년 개최된 주요 세계위원회)와 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평화교육을 위한 국제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상당한 여행을 요하지만 ‘개발을 위한 군축 캠페인’의 기반을 닦았던 몇 권의 책을 저술할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 저서는 「Warfare or Welfare?」(전쟁 또는 복지?) 「Whose Priorities? A guide for campaigners on military and social spending」(누구의 우선순위인가? 군비와 사회복지비에 관한 캠페인 가이드)인데 관심 있는 몇 분에게 드릴 수 있다.

국제평화센터(IPB,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의 역사는 길고도 매우 흥미롭지만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IPB는 1892년에 연례회의 개최를 위한 사무국과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느끼는 평화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IPB는 대부분 스위스에서 운영되지만 토론회는 유럽과 그 밖의 많은 지역에서 열렸다. IPB는 설립 초기에는 평화교육을 포함한 갈등해결 수단 개발뿐만 아니라 군축과 중재 촉진에 주력했었다. 그 후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IPB와 소속단체들은 다른 많은 이슈들도 다뤘다. IPB는 19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1941년 이전에도 IPB 주요활동가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IPB의 전성기는 1차 세계대전 즈음 이미 끝나버렸다. 빈번하게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했고 사무국은 고립되었다. 또한 두 번의 세계대전과 파시즘의 도래라는 도전의 시기에 직면해야 했다. 1924년 사무국은 스위스로 이전했다. IPB는 League of Nations(국제연맹) 설립을 촉구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IPB는 국제연맹, 국제연맹 추종자들, 다른 평화단체 설립 등으로 빛을 바랬다.

2차 세계대전 후 IPB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 1964년 새로운 사무실과 함께 재설립되었다. IPB는 유엔평화유지군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며 유엔에 제출하는 양심적 거부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했다. 그 후 IPB 소속단체들의 수는 증가했다. IPB는 핵군축, 동서 대화 등 냉전이라는 도전에, 특히 유엔 차원에서 관여하게 되었다. 1990년 이래 IPB는 많은 도전에 대응해야만 했다. 평화운동은 냉전의 종식, 경제적 세계화의 심화, 대테러 전쟁 등과 관련해 스스로의 역할을 조정해왔다. IPB 멤버들은 중동, 발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전쟁과 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그들은 지뢰, 집속탄 반대, 소형무기 및 무기 거래에 대한 새로운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군축에 기여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미군기지 반대, 국제형사재판소 지지, 소년병 반대, 인권 옹호와 같은 진보적 운동을 함께 해 왔다. 또한 이 기간은 테크놀로지 변화에 있어서도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핵무기는 여전히 세계 안전에 주요한 위협이며, 1985년 이래 핵무기는 IPB 활동의 중심에 있다. 우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World Court Project¹⁵⁾, International Test Ban Campaign (국제핵실험반대캠페인), Abolition 2000 network¹⁶⁾, 핵무기 협약을 목표로 노력하는 시장

15) [번역주] World Court Project는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을 알리는 전세계적 캠페인으로, 이 캠페인의 결과로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이 불법이며, 국가들은 핵무기 제거를 위한 협상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판결 내렸다. [The Legality of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 Guide to the Historic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6) [번역주] Abolition 2000은 핵군축을 위한 11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핵무기 제거 협상을 요구하는 국제캠페인이다. 9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20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이 국제캠페인에 참가하고 있다.

(mayors), 의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다.

개발을 위한 군축과 군비

9·11 직후 IPB는 부시가 이끄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독트린과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확대하기 위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프로그램인 '개발을 위한 군축'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한다.

- (1) 기후변화 완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군비감축 투쟁
- (2) 갈등 지역의 가난한 마을에 각종 무기가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다양한 무기체계를 제거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 전개
- (3) 원조의 군사화 (militarization of aid), 군사기지의 확장, 성 인지 (Gender perspectives), 무엇보다 가열되고 있는 자원경쟁으로 인한 군사화를 정당화하는 일 등 추가적인 이슈들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군비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군비에 할당된 재원이 사회복지비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빈번히 제기해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군비 문제를 타파하는 것은 어렵다.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군축 문제에 대해서는 조약이 있는 반면 군비에 관해서는 이러한 구속성 있는 조약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 총회 결의안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왜냐하면 군비는 자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IPB는 전국적 연대를 구축하고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것에 집중해왔다. 덧붙여 우리는 군비 관련 정보가 기밀이거나 언론이나 대중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비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대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로비와 압력단체의 활동 대상은 보통 의제를 정하고 정책을 승인하는 의원들과 정당이다. 인물 중심의 정치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군병력 배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관한 입장은 보통 이미 견고하게 확립된 정당의 입장에 종속되어 있다. 국가안보 관련한 문제에는 양당 또는 다자정당의 합의가 존재한다. 이것은 곧 비판적 시각은 소수 정치인이나

http://www.abolition2000.org/?page_id=2

주류 밖 언론사를 통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경제위기의 결과로 몇몇 서구 정부들이 15년여 만에 처음으로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에 더 많은 돈을 재배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연례군비통계 보고서 발간과 함께 2011년 4월 12일에 군비에 관한 세계 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이 개최될 것이다. 이날 IPB와 워싱턴 소재 IPS(정책연구소)의 주관 하에 군비 문제에 대한 대중, 정치,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러한 행사는 군비 문제와 관련한 국제연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여기 모인 모두가 이 행동에 동참하길 권하며, 군에 대한 과도한 투자 행태를 바꾸고 대신 사회복지와 생태적 요구에 더 투자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

캠페인 사례

군축 분야 캠페인 성공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군비, 무기거래 문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집대성한 ‘개발을 위한 군축’ 두 번째 책 「누구의 우선순위인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 과테말라

1996년 과테말라 평화협정은 군병력의 33% 감축, 국방예산이 GDP의 0.67%를 초과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이 수준은 2000년에 달성되었다. 그러나 유엔 과테말라 미션은 예산 조작 때문에 군병력 감축도 국방예산 감축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아냈다. 2002년부터 인권단체인 Grupo de Apoyo Mutuo (GAM)와 Centro Internacional para la Investigacion en Derechos Humanos (CIIDH)등은 평화협정과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UNDP 지원으로, 평화협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과테말라의 국방예산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국가예산이 사회개발에 있어 중심이 될 것을 다시 촉구하고 있다. 언론인들, 지역 언론사, 비판적 의원들이 재정부를 통해 정부예산이 웹에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성공이 가능했다.

국방예산 모니터링 프로젝트는 예산의 의문스러운 이전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드러냈다. 분석 결과는 의회가 국방부로부터 해명을 요구하는데 사용되었다. 언론은 더 많은 대중이 이러한 분석 결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모니터링팀은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고, 사회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국방예산은 감소하는 전적으로 올바른 상태가 되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사례는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적이며 투명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특히 선출직 관료들과 탐사기자들과 연합하여 어떻게 영향력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http://www.gam.org.gt/>)

(2) 벨기에

지속가능한 투자 운동을 하는 벨기에 시민단체 Netwerk Vlaanderen는 금융사회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은행은 우리의 돈을 가지고 일한다. 은행은 그 돈을 군사 관련 분야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에 투자한다. 우리는 은행이 어떤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방산업체 투자에 반대한다. ‘나의 돈. 깨끗한 양심?(My money. Clear Conscience?)’ 캠페인은 은행의 투자정책에 중대한 변화와 방산업체 투자에 반대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캠페인은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일어났다. Netwerk Vlaanderen은 은행과 방산업체간의 재정적 연관성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보고서는 금융 데이터 자료를 기초로 하며, 네덜란드 소재 전문 조사국과의 협력 하에 만들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이 그들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들은 언론과 은행 고객들로부터 강한 반응을 불러왔다. 그 결과 은행은 그들의 투자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받는다. 투자 정보는 문서, 데이터, 기자회견, 웹사이트, 뉴스레터, 은행지점 앞에서의 행동 등을 통해 공론화된다. 우리는 청원, 길거리 상영, 예술작업(art project), 은행 총회에서의 비판적 질문 등을 통한 패러디(ad-busting)에서부터 정직하며 방산업체 투자를 공개하는 가짜 은행을 설립하고 논쟁이 될 만한 투자에 관한 텔레비전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조적 행동방법과 이미지를 개발했다. Netwerk Vlaanderen 또한 은행 측과 직접 대화에 나서고, 관심 있는 정치인들과 방산업체 투자 반대 법안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지속가능’(sustainable)이라고 표시된 모든 금융상품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펀드가 방산업체와 무관한지를 알려주는 자료를 은행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캠페인과 새로운 입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일부 금융 기관들은 무기생산업체들과의 투자관계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이 무기생산업체들을 배제하는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이러한 의제가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그들의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에 관한

문서를 공개한 후 몇몇 네덜란드 연금펀드들은 더 이상 집속탄 방산업체에는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르웨이 정부 연금펀드 또한 이러한 무기 생산업체를 투자 대상에서 배제했다. (<http://www.netwerkvlaanderen.be/en/>)

캠페인 방법

마지막으로 나는 캠페인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제공하고자 한다. 나는 아시아에서의 시민사회 운동이 유럽이나 북미하고는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는데 유념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시민사회가 민족주의/반식민지 투쟁을 기반으로 성장한 이래 최근에는 기본권 즉, 결사의 권리, 집회의 권리, 또는 심지어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 등에 관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서구에서는 실종된 대규모 동원의 전통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 캠페인 배경의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 우리 모두 대중매체에 관여하고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우리 모두 정치적 연합을 구축하고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과 지원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캠페인을 할 수 있나’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해온 전 그린피스 활동가, Chris Rose의 활동(<http://www.campaignstrategy.org/index.php>)으로부터 직접 인용한 것이다. 나는 그의 기본 생각을 7가지 컨셉으로 분류했다. 이것들은 뻔해 보이지만 잘 통합하면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제공한다.

(1) ‘**캠페인**’은 행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추고,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행동의 동기는 증가시킨다. 반대로 ‘**교육**’은 넓은 의미의 활동이다. 교육은 확실성을 낮추는 대신 이해는 높이면서 복잡함의 층층을 드러내기 위해 예제를 사용한다. 캠페인은 청중의 지식이 아닌 동기를 극대화한다. 교육을 캠페인에 사용하는 것을 시도한다면 이슈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슈 주변을 돌면서 연구하다가 끝날 것이다. 물론 모든 캠페인은 ‘교육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보 제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한 교육이다. 덧붙여 정보는 동원을 이끌 때까지는 아직 힘이 되지 못한다. 만약 진정 정보가 힘이라면 세계는 사서(librarians)들에게 의해 움직일 것이다.

(2) **요인을 분석하라(Analyse the forces)** : 당신은 당신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당신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도 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아직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묻는다. 관련된 사람들, 단체들, 기관들 등 문제점들을 지도로 그려보라. 그리고 당신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라.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라.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누가 당신의 주요 청중인지 알아내라. 이것을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당신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에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힘의 균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확인하라. 만약 이 답을 모른다면 당신은 달성할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겠는가?

- (3) **적절한 요소... 적절한 순서(Right components... right order)** : 캠페인은 관심과 자각을 통해 '청중'이 무시에서 분노와 개입의 단계로, 마침내 만족 또는 보상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일련의 정교한 폭로 또는 소통에 관여하는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캠페인 참가자들이나 지지자들은 더 많은 것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Brent Spar 석유시설을 점유한 그린피스의 사례를 들어보자¹⁷⁾. Shell사에 대항하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투쟁은 수개월이나 지속되었고, 텔레비전, 라디오, 언론은 매일같이 보도했다. 의도된 침몰이 보여주는 몇 시간 동안의 드라마는 간단했다. 침몰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문제점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우려를 이끌어 냈지만 그 자체가 행동을 이끌어내지는 않았다.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 그들은 분노할 수 있다. 그들에게 지금이 변화를 위해 힘쓰고 해결책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 그러면 당신은 개입(engagement)할 수 있는 상황에 있게 된다. 캠페인은 지식, 해결책과 같은 뭔가를 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캠페인은 사람들이 변화에 관여하고 그 결과 해결책이 달성 가능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다.

- (4) **'복잡성'**은 동기를 저하시키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혼란스러워지면 그들은 당신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할 것이고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의 캠페인은 복잡한 사진, 텍스트 또는 과정을 꿰뚫는 중요한 선, 빨간 실과 같아야 한다. 캠페인은 '전체 그림'이 될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당신이 생각한 게 무엇인지, 문제, 해결책, 기회 등 당신의 캠페인을 알려라. 단지 그것이다. 전체 스토리를 말하려 하지 말라. 당신의 생각,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석만 알려라.

17) Shell사는 운영하고 있던 석유저장시설 Brent Spar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자 1991년 이를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업체는 Brent Spar를 얇은 물가로 인양해와 독성 성분을 제거하고 자재를 재활용하는 방법과 심해로 인양한 뒤 이를 폭파해 가라앉히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심해에서 Brent Spar를 폭파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반대하며 Brent Spar를 3주 이상 잠거했다. http://en.wikipedia.org/wiki/Brent_Spar

(5) 공식적 의미의 정치이든, 기업의 정치이든 개인적 정치이든 간에 ‘**사건(events)**’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뉴스는 아이디어나 개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발생한 것에 관한 것이다. 매일 이 캠페인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문해 보아라. 무엇이 동사인가? 캠페인이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있는가, 출판하고 있는가, 막고 있는가, 구조해주고 있는가, 점유하는가, 행진하는가, 로비를 하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뉴스는 정치를 사건과 연결 짓는 것이다. 사건은 또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들이다. 때때로 캠페인은 사회가 두 가지 상반된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고 새로운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적 순간을 성취하기도 한다. 혹자가 ‘논쟁을 마무리 지으려’ 하거나 ‘내가 처음 그것을 알아챘을 때를 기억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캠페인은 현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에 관한 것이다. 반면 갈등은 현 상황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캠페인 대부분을 정의한다.

(6) ‘**이미지(Pictures)**’ : 왜인가? 왜냐하면 그림은 말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그림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그림은 참고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림은 심문을 받거나 논쟁할 수 없다. 그림이 있는 캠페인은 서면 보고서에서는 걸려진 감정에 대해 소통할 수 있다. 텔레비전은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가능하다면 몇 초 내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오페라 또는 영화를 생각해보라. 당신의 캠페인이 전설적인 인물과 상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라. 그림보다 강한 것은 얼굴과 얼굴이 직접 대면하는 것이고, 직접 캠페인에 관여하는 것이다. ‘들으면 잊는다. 보면 기억한다. 행동하면 이해한다. - 공자’

(7) ‘**소통(Communication)**’ : 소통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당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것이 이해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소통이란 그저 당신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쓸모 있는 소통은 그들의 생각이 당신의 머리에 들어왔을 때 생긴다. 많은 캠페인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청중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지지자들 하고만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 다른 캠페인도 활동가들이 캠페인의 효과의 증표를 찾기보다는 ‘보도(coverage)’되는지 여부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 당신의 입만 큼 당신의 귀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이러한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상황에도 적용가능한가? 이것이 우리가 토론해야 할 사항이다. 오늘 발제가 흥미 있었길 바라며 당신의 투쟁과 캠페인에 대해 듣길 바란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성패가 달려있는 것도 많이 있다. ※

■ 참고자료. 군비에 관한 세계 행동의 날 참여 제안서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JUNE 2011**



Washington DC/Geneva, 8th November 2010

Dear colleagues,

Advance notice: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APRIL 2011

In 2009, global military spending surged to an all-time high of US \$1.53 trillion. Given the numerous crises facing the planet -- economic, environmental, health, diplomatic -- we must create a global movement to shift this money to human needs. Thousands of organizations and millions of individuals support this point of view. Because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governments are even beginning to talk about cutting military spending. But they won't make these cuts unless we pressure them to do so. We need to begin a serious mobilizing effort on a global scale to make visible our demands to feed people not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As part of this campaign, we propose a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for 12th April 2011 (NOTE NEW DATE) to coincide with the release of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 annual report, which will include new figures on military expenditures. On this day, people all over the world will join together in actions to focus public,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on the costs of military spending and the need for new priorities. Such events will help us to build the international network around this issue.

While each location will craft its own approach, we hope there will be a common focus on calling attention to the overall size of global military spending. This would need in most cases to be linked to a related national (or local) issue, such as the Afghanistan war/arms trade deals/work against small arms/resources for nonviolent conflict resolution/Article 9 campaign etc. We very much hope that peace groups will use this as an opportunity to connect up with anti-poverty, environmental, pro-democracy organizations and others who share our perspective.

As for types of actions: a whole range is possible -- from street theatre/demonstrations and erecting banners to seminars, signature collection and much more. Many slogans come to mind: What Would You Do With \$1.5 Trillion? \$1.5 Trillion Is Insane! Trillions for War or Trillions for Peace? etc. We plan to issue a Toolkit before long to assist organizers. A key aspect is the visual side. By generating some captivating images, we plan to attract widespread media coverage and make available photos of our rallies and events. We will compile an album of pictures from around the world and post them online to document the global movement and to use to accompany stories about the SIPRI report and our own actions.

We hope you agree that this is an exciting and important project. As a leader in peace activism, we would like you/your organization to join us by (co-)sponsoring an event in your city. We will work with you to identify other people in your area to collaborate with.

You will see below a list of organisations who have already committed to organising some kind of action. What we now need is to extend this list much further, in order to inspire us all to go

forward with the planning. We are keen to show that this issue is indeed a worldwide one, requiring creativity and commitment.

Please write to us if you a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please reply to both emails.

Sincerely,

John Feffer /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Washington, DC / johnfeffer@gmail.com /
<http://www.ips-dc.org/>

Colin Archer / International Peace Bureau Geneva / secgen@ipb.org /
<http://www.ipb.org>

PARTICIPATING ORGANISATIONS: (INITIAL LISTING)

INTERNATIONAL

Global Action to Prevent War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Peace Bureau
Pax Christi International
Peace Boat/Global Article 9 Campaign
Religions for Peace
War Resisters International

GREECE

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INDIA

All India Peace & Solidarity Organisation,
Maharashtra State Committee, Nagpur

IRELAND

Peace and Neutrality Alliance PANA

PHILIPPINES

Stop the War Coalition

SOUTH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ace Network

SPAIN

Fundacio per la Pau

USA

Bay Area: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Code Pink

Boston:

Resist Africom

Honolulu: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Maine:

Bring Our War \$\$ Home campaign

New York

Arms and Security Initiative, New America
Foundation

Washington D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Western Mass.:

National Priorities Project

공동안보(Common Security)로서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전략

유아사 이치로 / 피스데포(Peace Depot)

1. 계속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냉전구조

동북아시아에는 상대적으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들이 많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그 예이다. 일본과 한국에는 또한 미군기지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연간 총 예산의 30퍼센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상당한 재원이 군사비로 낭비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있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냉전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는 세계 유일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다. 심지어 냉전 종식이 20년이나 지났지만,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휴전 협정 아래 드리워진 군사 분계선인 38선이 이러한 상황을 상징한다. 그 결과 악순환의 구조 “안보 딜레마”는 여전히 동북아시아에서 작동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은 끝나지 않았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남한의 초계함, 천안함 침몰했다. 이 사건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2010년 5월 20일 발표된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는 초계함(천안함) 침몰은 북한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의 비접촉 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미국과 한국은 일본해(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 한미는 연례합동군사훈련(독수리 연습, Foal Eagle)을 실시하고 있었다. 더구나 천안함 항적기록, 통신기록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 공개를 한국정부가 거부해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사건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는 부분적이거나 군사력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군이 이러한 확신을 가진 가장 대표적 집단이다. 미군은 전 세계에 700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200,000명의 군인들이 해외에 배치되어 있다.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5개국은 대규모 군사기지를 미군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미군기지 90% 이상이 이 다섯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80,000명의 미군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군의 주둔은 북한에 상당한 압력을 주었고,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2006년, 2009년 두 차례 핵실험과 같은 벼랑 끝 전술을 취하게 만들었다. 반대로 이것은 일본에게 더욱 더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집중하고 공동 방어권 발동을 모색하게 하는 구실을 제공했다.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어느 지역이든 미국 자국의 이해를 위협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재배치되고 있다. 이것을 이른바 ‘Lily Pad Strategy’(수련잎 전략)라고 부른다. 유연성과 기동성이 이 전략의 주요 원칙이다. 개구리 한마리가 연못 위에 떠있는 잎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연못의 어떤 곳이라도 이동한다고 상상해 보면 된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들은 상당한 인프라를 갖춘 주요 기지들로 간주된다. 미 해병대의 판으로의 재배치, 후텐마 비행장의 나고(Nago)로의 이전은 미군의 세계적 재배치의 필요조건이다.

더불어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비는 매년 평균 15%씩 증가해왔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눈에 띄는데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접근불가전략(anti-access strategy)”을 강화해왔다. 미군은 일본 사세보(Sasebo)에 위치한 미 해군기지의 소해함의 수를 두 배로 늘리고 오키나와 근해에 공격형 핵잠수함의 경계를 늘리도록 주문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보 딜레마’를 보여준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개발을 추진하고,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연합은 더욱 더 긴밀해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군사 현대화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상호불신이 유발하는 지역 핵군비 경쟁 하에서 발생하는 악순환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결코 끝나지 않을 군사적 긴장 외에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극복하지 않으면 군축으로 가는 길은 상상할 수도 없다.

2. 공동안보로의 길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공동안보(common security)”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공동안보는 보복만을 부추기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다자대화와 협력을 의미한다.

1982년 Palme Committee(군축과 안전보장에 관한 독립 위원회)는 “공동안보” 개념을 처음으로 창안했다. 공동안보는 모든 국가들의 안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공동안보”는 다자대화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동안보의 주요 원칙은 아래와 같다.

- 군사력은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어느 한 국가의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자기 통제(self control)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안보는 군사 우위에 의해 달성될 수 없다
- 양적, 질적 군축은 공동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런 방안은 냉전종식의 길을 열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유럽연합이 형성되었다. 또한 19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출현했다. 유감스럽게도 동북아시아에는 여전히 이러한 움직임을 발견할 수 없다. 그 당시 동북아 지역에도 냉전을 다루기 위한 미일안전보장협약(US-Japan Security Pact)과 일본 자위대 근거에 대해 재검토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냉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응징하려던 미국의 걸프전의 충격파를 이용해서 재검토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딛 데로 돌렸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라크 보복전쟁을 돕는 것이 “국제적 기여”라며 잘못된 주장을 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1990년 중반 미-일 정부가 안전보장협약을 개정해서 미일관계를 “국제동맹(global alliance)”로 바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다자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공동안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65년 동안 일본의 평화주의 역사가 일본의 국제적 명성을 높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 헌법 제9조를 근거로 한 일본의 외교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아래 비군사적 외교 정책을 선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 시민사회가 다루어야 할 커다란 과제

이다.

다음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공동안보로 가는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다.

3. 동북아시아 비핵화에 관한 이슈들

1990년대 초반 냉전의 종식으로 동북아시아는 당시 군사 배치와 핵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2년 2월 20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획기적인 선언을 통해 남북은 핵무기를 실험, 제조, 생산, 수용,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비록 이 선언이 비핵지대로 간주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번째 비핵지대화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 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검증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주변 핵보유국(중국, 러시아, 미국)에 의한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관한 의정서는 여전히 협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비핵화공동선언 2년 만에 북-미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마련하려는 주체들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 이후에도 우여 곡절은 20년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2003년 6자 회담이 시작되었고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이러한 해결책에 합의하자마자, 협상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각자 인식의 차이점만을 강조했다. 우리는 아직도 이 해결책을 실현시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금융 기관들의 몰락은 2009년 세계경제 침체를 초래했다. 그리고 굶주림과 궁핍은 긴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초로 열린 핵 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핵무기 폐기를 향한 매우 강력한 정치적 모멘텀을 형성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커뮤니티(East Asian Community)" 출현을 주창하는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었다. 하토야마(Hatoyama) (전)총리는 2009년 9월 유엔안보리 정상회담에서 "핵보유국 5개국들과 동북아시아 비핵국가들간의 조율을 통한 비핵지대의 창설은 오늘 결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발언이 아직은

너무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일본 정부의 주장이 이러한 국제적 회담에서 비핵지대 사례를 강조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촉진하고 세계 핵폐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4. 동북아 비핵지대

비핵지대란 핵무기가 없는 지리적 구역 창설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적 체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이 지리적 구역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핵무기의 개발, 제조, 배치가 금지된다. 이점이라면 이 요건이 일본, 남한, 북한과 같은 동북아시아 세 국가 주장하고 있는 현존 정책들을 토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여전히 실효성이 있으며, 이것은 최근 6자회담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일본은 핵 제조, 보유,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이 있다. 또한 일본의 1955년 핵에너지 기본법은 핵에너지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했다. 2009년 9월 출범한 일본의 새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고 핵무기 도입 관련 미일비밀협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이러한 정책들이 준수된다면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된 것이다.

다른 하나의 요건은 소극적 안전보장이다. 즉 핵보유국이 이웃 비핵국가들을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맥락에서 보면 중국, 러시아, 미국(비록 미본토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있긴 하지만)의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핵지대는 실현될 수 있다. 시민들은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아닌 비핵우산(non-nuclear umbrella) 하에서 삶을 보장받는 것이다.

비록 정부들은 이러한 비핵지대 이니셔티브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적이 없지만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왔다. 1995년 히로미치 우메바야시(Hiromich Umebayashi) 박사(Peace Depot 특별 고문)은 “3+3” 형태의 동북아 비핵지대를 제안했다. 앞의 ‘3’은 비핵국가 일본, 남한, 북한을 의미하고, 뒤의 ‘3’은 핵보유국 중국, 러시아, 미국을 의미한다. 2004년 한국 시민단체, 특히 평화네트워크와의 공조를 통해 협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핵보유국들은 처음부터 이 “3+3”의 틀에 포함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현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이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6개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참가국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정부는 6자회담 제5 실무그룹 협상 테이블에 “3+3”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북한의 핵 보유 주장과 동북아 내 군사적 긴장을 이용해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더욱 더 공고히 해왔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왔다. 핵보유 5개국이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이라는 목표를 공식화하는 지금 시점에,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안보를 핵무기에 의지했던 비핵국가들(일본, 한국)은 핵무기를 배제시킨 안보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모멘텀을 강화해야 한다.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은 이런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답이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민주당이 이끄는 새 정부는 동아시아 커뮤니티(East Asia Community) 설립을 주요 외교 정책 중 하나로 주장해 왔다.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써 동북아 비핵지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매우 논리적이다.

북한은 2006년,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자신들의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실상(de facto) 핵보유를 선언했다. 따라서 북한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핵보유에 집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북한이 실전에 사용가능한 무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획득했는지는 아무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언젠가 6자 회담은 재개될 것이다. 하지만 핵보유국들과 핵우산을 보장받는 비핵국가들(즉 일본과 한국)은 핵무기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만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이해할 만하다. 일본과 한국은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북한이 핵폐기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동북아 비핵지대를 제안해야만 한다. 동북아 비핵지대가 설립이 된다면 북한은 핵무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 북한 관계자가 2009년 10월 12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은 현재 한반도의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세계의 마지막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고, 결국에는 한반도 전역을 비핵화하자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세계에는 다섯 개의 비핵지대가 있다. 특히 남반구 대부분이 비핵지대이다. 지구상의 핵무기 숫자는 여전히 23,000개를 초과한다. 하지만 남반구의 시민들은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자유롭다. 중앙아시아의 비핵지대 조약은 2006년 9월 체결되었고, 2009년 발효되었다. 그 다음으로 동북아시아 지역도 이러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

5. 의원 · 시장 · 시민간의 국제협력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안보”를 강하게 주장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비핵지대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 이러한 민심은 관련국가 정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국의 의원들, 정당들, 시장들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정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의 폭 넓은 지지를 얻는 게 필요하다. 2008년 8월 일본 민주당 군축연구회는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초당파적이어야 한다. 한일간 의원 네트워크의 설립 또한 중요하다. 2009년 11월 히데오 히라오카 의원(Hideo Hiraoka, 일본 민주당)이 서울을 방문해 여러 정당 소속 한국의원들을 만났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라는 특정 주제로 한일 의원들이 모인 첫 번째 회의였을 뿐만 아니라 ‘핵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NND)’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첫 번째 회의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을 포함한 당파를 초월한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다음과 같은 한나라당의 한 의원의 발언이 인상 깊었다. “나는 이제까지 핵 이슈는 좌파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이슈 중 하나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그 다음에는 일본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만약 다른 국가들이 오로지 강경조치에만 의존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도적 지원처럼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이 좀 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0년 2월 네 명의 한국 의원들이 동북아 비핵지대 국제회의에 참가를 위해 도쿄를 방문했다. 일본 의원들과 시민단체들도 참석하였다. 이 국제회의는 핵군축을 위한 ‘핵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NND)’ 한국위원회와 일본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것이다. 그 회의에서 이러한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약속했다.

군축과 안보 이슈들은 지역사회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지방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현재 1,831개 중 1,510개의 지방정부가 비핵 지위(nuclear free status)를 선언했다. 260개의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JNFLA(National Council of Japan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동북아 비핵지대 이니셔티브의 증진이다. 유엔 총회에서

는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들이 계속해서 채택되고 있고 이 결의안들은 일본 정부, 유엔 사무총장,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 등에게 제출되었다.

2010년 5월 6일 뉴욕에서 열린 NPT(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부대 행사로 6개 일본, 한국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워크숍 “핵무기 없는 세상 추동할 동북아비핵지대화 : 의원, 시장, 시민들의 공동의 요구”를 개최하였다. 피스데포(Peace Depot, 일본)를 비롯해 피스보트(Peace Boat, 일본), 세이-피스 프로젝트 (SAY-Peace Project, 일본),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노틸러스 아리 등이 공동 주최하였다. 이 워크숍의 의미 있는 부분 중 하나는 JNFLA의 대표단 시장들의 호소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동북아 비핵지대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풀뿌리 외교(grassroots diplomacy)로써 자매 도시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현재 129개의 일본 지방정부가 한국 지방정부와 자매 도시 결연을 맺었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활용해서 우선 한일 시장(mayors)들이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년에는 한일 양국의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의 개최를 제안하고자 한다. 히로시마의 자매 도시인 대구가 이러한 국제회의를 열기에 적절한 도시가 될 거라 생각한다.

피스데포가 동북아 비핵지대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들이 협력해서 서울, 일본, 상하이, 뉴욕, 제네바 등지에서 수많은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04년에는 한일 양국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고안하여 동북아 비핵지대 협약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에는 동북아 비핵지대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 논의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중 하나라도 (일본정부에 기대하며), 반드시 동북아 비핵지대를 달성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 외교협상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2009년 3월 일본 피스데포, 피스포트, 그리고 한국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동북아 비핵지대 지지 성명서’에 연명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을 지지하는 전세계 시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이슈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들의 연명 명단 전체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주요 개인 연명자들은 더글라스 로체(Douglas Roche, 전 캐나다 군축 대사), 타다토시 아키바(Tadatoshi Akiba, 히로시마 시장), 토미히사 타우에(Tomihisa Taue, 나가사키 시장) 등이

있으며, 주요 연명 단체로는 국제평화센터(International Peace Bureau), 영국의 핵군축 캠페인(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일본의 평화를 위한 시장들의 모임(NIHONHIDANKYO), 일본의 지방정부 네트워크(JNFLA) 등이 있다.

또한 중국의 동북아 비핵지대 지지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은 소극적 안전보장을 선언했고 북한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일본과 한국 양국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층적 협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현재 세계에는 다섯 개의 비핵지대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중 어느 하나도 쉽게 설립된 경우는 없다. 비핵지대를 설립하는데 있어 정부가 비핵지대 계획을 수립하고 유엔에서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최소 9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프리카 비핵지대의 경우는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각 지역의 국가들은 그들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어려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씩 해소하고 상호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관련국들 사이에 없었더라면 현존하는 비핵지대들은 설립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동북아 비핵지대 협약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폭 피해 국가로서 그 책임감 완수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었지만, 2010년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에서는 동북아 비핵지대 이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각국 정부들에게 호소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은 동북아 지역에서 비군사적 안보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다. 비핵지대 협약에 관한 다자간 회담을 통해 관련국간의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 이것은 불가침 및 전쟁 포기에 관한 협정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안보를 향한 과정임에 틀림없다. 나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향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들의 협력이 군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 참고자료 동북아 비핵지대화 지지 성명

아래 연명한 우리는 동북아 비핵지대화(NEA-NWFZ) 설립 노력을 지지하는 바이다. 우리는 '동북아 비핵지대화'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전 세계적 흐름을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긴급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제안(initiative)이라 믿는다.

동북아 비핵지대화 달성이라는 목표 설정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2005년 9.19 공동성명)라는 6자 회담의 목표를 더 넓은 지역 비전으로 통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의 6자 회담에 긍정적인 측면을 새로이 부여할 것이다.

세계 핵군축은 핵무기 보유국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의무이다. 그 중에서 특히, 소위 핵우산(nuclear umbrella)에 의존하는 안보 정책을 가진 국가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국가들은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 정책을 찾아낼 책임이 있다. 동북아 비핵지대화(NEA-NWFZ)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관련국들에게 그러한 길을 제시할 것이다.

'3+3 협정(3+3 arrangement)'이 동북아 비핵지대화(NEA-NWFZ)를 위한 현실적인 안일 것이다. 이 협정에 의거, 한국, 북한, 일본은 동북아 비핵지대의 중심적 역할을 구성하게 되고, 이웃한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일본의 '비핵 3원칙'에 기반한 안전보장 조항을 통해 비핵지대를 지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가 및 지역 지도자, 시민단체, 개개인에게 그들이 동북아 비핵지대화(NEA-NWFZ) 지지를 표명하고, 동북아 비핵지대화(NEA-NWFZ)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제안단체: 피스데포(일본), 피스보트(일본), 평화네트워크(한국), 참여연대(한국)

※ 여러분의 지지 연명은 이메일 pspdint@pspd.org 또는 hstrip@pspd.org 로 받습니다.

※ 연명 명단 (2010년 9월 20일 현재)

Japan:

Gensuikin (Japan Congress Against A- and H-Bombs)
Gensuikyo (Japan Council Against A- and H-Bombs)
Hiroshima Alliance for Nuclear Weapons Abolition
Nagasaki Global Citizens' Assembly for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Executive committee
National Council of Japan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Nihon Hidankyo (Japan Confederation of A- and H-Bomb Sufferers Organizations)
Peace Boat
Peace Depot, Inc
Physicians Against Nuclear War

Overseas (including International):

Blue Banner (Mongolia)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Chinese People's Association for Peace and Disarmament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New Zealand)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Against Proliferation
International Peace Bureau
Mayors for peace
Nautilus ARI (ROK)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USA)
Peace Action (USA)
Peace Network (ROK)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Western Australi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OK)
PND NSW Nuclear Flashpoints Project (Australia)
Hon. Tomoko Abe,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pan)
Tadatoshi Akiba, Mayor of Hiroshima (Japan)
John Burroughs, Executive Director,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Prof. Hyunback Chung, Sungkyunkwan University (ROK)
Dr Kate Dewes,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Christchurch (NZ)
Prof. Seiji Endo, President, Jap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Hon. Kenzo Fujisue,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Japan)
Commander Robert Green, RN (Ret'd)
Xanthe Hall, IPPNW (Germany)
Hon. Hideo Hiraok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pan)
Wade L. Huntley, Director, Simons Centre f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Research
Hon. Satoshi Inoue,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Japan)
Hon. Tadashi Inuzuka,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Japan)
Prof. Katsuko Kataoka, Secretary General, JPPNW
Hon. Shoichi Kondo,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pan)
David Krieger, President,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Prof. Kaneko Kumao, Former director of the Nuclear Energy Division of the Foreign Ministry of Japan
Mikyung Lee, Member of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ROK)
Suktae Lee, Former President of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OK)
John Loretz, Program Director, IPPNW
Greg Mello, Los Alamos Study Group
Dr. Zia Mian, Princeton University
Prof. Kazumi Mizumoto, Hiroshima Peace Institute
Dr. Dovchin Myagmar, Director, Blue Banner (Mongolia)
Hon. Katsuya Okad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pan)
Prof. Sun-song Park, Dongguk University (ROK)
Hon. Douglas Roche, O.C., Former Canadian Ambassador for Disarmament
Prof. Dingli Shen, Director of Center for American Studies, Fudan University (China)

Alice Slater, Director,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NY
Prof. Tatsujiro Suzuki, Tokyo University, Peace Pledge Japan
Prof. Terumi Tanaka, Secretary General, Hidankyo (Japan Confederation of A- and H-Bomb Sufferers Organizations)
Tomihisa Taue, Mayor of Nagasaki (Japan)
Hon. Minoru Terad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pan)
Hideo Tsuchiyama, Chair, Organizing Committee of the Nagasaki Global Citizens' Assembly for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Rhianna Tyson, Senior Officer, Global Security Institute
Senator Jo Vallentine (Australia)
Achin Vanaik, Member of the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the CNDP (India)
Alyn Ware, Vice-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
Patricia Willis, Coordinator, Pacific Peace Working Group

Convened by:
Peace Depot, Inc (Japan)
Peace Boat (Japan)
Peace Network (ROK)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OK)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Peace Depot
E-mail: office@peacedepot.org
TEL:+81-45-563-5101 FAX:+81-45-563-9907

동북아여성평화회의 : 동북아 지역의 평화, 화해, 협력을 추구하며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We believe peace is coming!)”

-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참가자들이 DMZ 부근에서 외친 구호

1.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문제의식

2007년 처음 회의를 구상했을 때는 <여성6자회담>을 열 계획이었다. 당시 정부 차원의 6자 회담에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운명을 결정할 협상테이블에 남성만이 보였다.

공식적인 평화와 안보 관련회담에 여성들은 어디에 있는가? 왜 평화협상 테이블에 여성은 없는가? 우리 여성은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대안적인 여성6자회담을 구상하게 된 이유이다.

6자회담은 한반도비핵화, 북미외교관계 정상화,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별도의 포럼 구성, 동북아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6자회담의 진전은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체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새로운 평화와 협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의 문제는 정부나 남성들만의 몫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정부만의 또는 남성만의 주도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평화협상과정이 외부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안임을 느낄 때 가능하다. 각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으로 동북아시아를 고민하며 역사가 남겨준 상처를 씻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고 대화를 통해 공유 가능한 틀로서 동아시아를 가꾸는 노력을 함께 할 때 가능하다.

2.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의미 및 과정으로서 여성 6자회담

1)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

한국 여성의 지위는 지극히 낮다. 10월 12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0년도 성 격차 지수’는 남성에 대비한 여성의 지위를 잘 보여 준다. 한국은 세계 134개국에서 104위다. 평화와 안보영역에서 여성의 지위 역시 낮다.

분쟁 상황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분쟁상황과 군사문화가 성매매와 성폭력을 부추긴다. 한반도에서 열전은 없지만 냉전이 지속되면서 군사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은 동북아 분단으로 연결되어 ‘적’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비 지출을 증가하며 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지출은 55%나 증가하였다. 동북아지역의 군사비를 남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 교육, 의료,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최근의 여성평화운동은 여성을 분쟁의 피해자로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의 당사자로서 이해한다. 국제사회에서 갈등해결과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적극적인 개입을 주창하는 활동이 유엔을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유엔은 2000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1325호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유엔 조직이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유엔과 각국 정부가 1325를 이행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지표표를 작성하였다. 이 지표는 분쟁지역에서 여성평화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 주고 있다. 3P와 R&R이다. 첫째, 분쟁이 남녀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분쟁 예방 활동과 전략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Prevention). 둘째, 정책 결

정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한다(Participation). 셋째, 여성과 여아의 인권, 신체적 훼손을 막고 경제안보를 보장한다. 또한 법률적 제도적 개혁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한다 (Protection). 넷째, 모든 구호회복 활동에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Relief & Recovery).

또한 개별 국가차원에서는 1325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작성해서 이행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을 포함해 23개국 정부가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0년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를 지지하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1325 이행을 위한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반도와 같은 분쟁지역에서 평화과정에서 여성참여는 지극히 중요하다. 평화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분쟁 후 여성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 민간, 남북 정부, 국제사회의 협조라는 삼위일체 속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한 주민과 정부가 평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현실화할 것이다. 한반도 절반인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평화는 불가능하고 평화 없이 여성의 발전은 없다.

2) 과정으로서 여성 6자회담

‘과정으로서 여성6자회담’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분쟁 예방과 평화실현을 위해 제기하는 3가지 관점을 이해하는 게 참고가 될 것이다.

첫째, 분쟁 예방과 평화실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중요하며 새로운 파트너십(New Partnership)을 형성해야 한다. 현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분쟁의 현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부나 기관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부단체(NGOs), 활동가, 학자, 정부 대표, 국제기구가 함께 일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둘째, 분쟁의 대응에서 예방으로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국제NGO와 각국 정부는 갈등예방보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대응의 문화(culture of reaction)에 익숙한 것이다. 이를 예방의 문화(culture of prevention)로 전환해야 한다. 갈등예방은 갈등이 폭력적으로 폭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를 감소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력갈등의 발발, 재발, 지속을 예방하기 위한 정치적인 문제, 개발문제, 인도주의적 조치와 인권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셋째, 분쟁해결과 분쟁예방은 전환의 과정(process of transformation)이다. 갈등해결과 예방의 문화는 과정의 역동성(dynamics of process)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즉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인간관계의 파탄과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하고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가 갈등에서 나타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회구조를 공존과 화해할 수 있는 평화적인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끊임없는 전환의 과정이다. 이런 전환의 과정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6자회담이다.

결국 여성6자회담은 북한과 미국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영역의 여성들이 만나 냉전으로 분단되었던 동북아시아를 잇고 평화공동체를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쌓는 과정으로서 갈등을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공동으로 배울 수 있는 참여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과 동북아시아 여성들이 정부의 6자회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독립적인 구상과 역할을 모색하고 국경을 넘는 여성들 사이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동북아시아 여성 연대는 긍정적인 공동의 기억을 쌓아 남과 북, 동북아 각국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정체성간의 차이를 뛰어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여성 연대를 통해 동북아시아 분단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평화와 상생(相生)의 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을 만드는 과정이다.

3.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역사

2007년 여성6자회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 여성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로 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국회의원과 여성단체 대표로 구성된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을 조직했다. “여성6자회담” 준비하기 위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방문하고 남북 교류의 현장에서 북한 여성을 만났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화해·협력·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평화협상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요구가 수용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여성6자회담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동북아 여성들이 활동하기를 촉구했다.

2008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과 함께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북한이 참가하지 않으면서 행사명을 동북아여성평화회의로 변경하였다. 중국·러시아·일본·미국·한국 여성 단체 및 국제여성단체 대표와 일본 및 한국 여성의원이 참가했다. 한국과 일본 의원의 대화, NGO 대표의 대화 모임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했다. 참가자들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이 지역에서 식민지 경험, 냉전 그리고 다른 사회체제에서 비롯된 상호 불신과 오해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신뢰와 공동이해를 모색했다.

2009년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는 미국 워싱턴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화해·협력력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조지워싱턴대학 아시아문제시거센터(The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와 공동으로 ‘2009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한국·영국 여성들이 행사에 참가했다. 한명숙 대한민국 전직 총리와 멀란 버비어 미국 국제문제여성대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정부와 의회에 보내는 제안서를 작성해 의회와 국무부를 방문하였다. 북핵문제와 한반도평화협정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 평화형성 및 해외원조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성킴 미국 6자회담 특별대사와 필립 골드버그 북한 제재대사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 행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여성 외교의 활성화 뿐 만 아니라 민간(여성)과 정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10월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회는 서울에서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열었다. 천안함 사태이후 한국, 미국, 일본을 한축으로 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한축으로 하는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중국·러시아·미국·일본·한국 그리고 북아일랜드 여성이 참가했다.

4.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목표

1)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공동방안 모색

북한핵문제를 논의했던 6자회담 참여국 여성들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과 여성의 역할’과 관련한 각국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과 제안을 교환한다. 여성평화회의는 동북아 여성들이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적 관점(regional view)에서 평화를 생각하고 동북아 위기의 핵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방안(common solutions)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냉전구조를 평화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촉진한다.

2) 정책제안서 전달

한국 정부와 6자회담 참가국 대사관을 방문해 6자회담 참가국들의 한반도 정책(북한핵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을 청취하고 평화회의에서 논의한 여성들의 정책제안을 전달할 것이다.

3) 트랙II 강화와 트랙I과 트랙 II의 협력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여성들의 Track II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의 Track I 활동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추동할 것이다. 한반도 전쟁의 종식과 평화 성립은 정부 사이 평화협정 체결 뿐 만 아니라 남북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트랙 I과 트랙 II 활동이 긍정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활동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UN안보리 결의안 1325 이행

평화회의 과정은 베이징행동강령(중심영역 E: 여성과 무장 갈등)과 “갈등해결과 평화와 안보의 유지, 촉진을 위한 모든 노력에 여성들의 완전한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한 UN안보리 결의안 1325 실현을 위한 동북아 국가들의 인식전환에 기여할 것이다.

5) 여성 글로벌 리더십 향상

북아일랜드 여성과 동북아 여성들이 공개토론회, 국회 및 대사관 방문, 전략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통능력의 향상, 국제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 확대, 국제행사 조직능력 배양, 외국어 실력 등 국제적 리더로서 자질을 향상시킨다.

5.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프로그램

- 행사명: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과 여성의 역할
- 일시 : 2010년 10월 5(화)-7일(목)
- 장소 : 서울, DMZ
- 주최 :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

일 정	내 용
10월 5일(화)	<공개행사> 장소: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 ·오전 : [기조발제] 1) 동북아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2) 평화협상과정과 여성- 북아일랜드에서 여성정당의 경험과 교훈 ·오후 : 각국 발표 - 남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저녁: 환영문화공연
10월 6일(수)	·오전 : 전략회의 '6자회담 참가국에 보내는 제안서 논의 및 로비 관련 전략회의' ·오후 : 미국 대사관 및 국회 방문 ·저녁 : 친목 및 네트워킹 (Networking Dinner)
10월 7일(목)	·현장방문: DMZ, 대인지뢰 피해자와 모임 ·환송만찬

6. 성과와 한계

1) 여성네트워크 확대 및 한계

- 새로운 파트너십 추구 : 여성단체 활동가, 학자, 국제단체 대표, 정부 관료 등 다양한 영역의 여성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성들의 권한 강화 추진
- Networking 수준 : 상설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행사 중심의 네트워크. 관계 형성, 신뢰 형성 추진, 국제회의 참가자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유지 강력 희망, 일부 국가에서 follow up meeting 개최(미국)
- 동북아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여성의 역량 문제: 행사를 계속할수록 외국 여성들을 초청하는 일이 쉽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에 평화, 안보 영역을 다루는 여성단체들이 별로 없고, 미국의 여성평화단체는 동북아지역과 관련하여 관심이 적고, 일본 단체는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나 북한과 연대하는 문제에 부담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

리고 이 주제에 대한 전문가와 정책결정자 들 중에서 여성이 적다. 만약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참가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 동북아평화회의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별 주체 형성의 어려움

2) 한반도 평화 관련 공동의 여성의제 개발 논의 및 로비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공동방안 모색 및 관련 정부에게 로비
미국 의회 및 국무부 방문, 주한 미대사관 방문, 한국 국회의원 방문, 6자회담국가에
게 제안서 발송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입장문서 발표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참가자 선언문
2009 미국정부와 의회에 드리는 제안서
2009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성명서“동북아 평화, 화해, 협력을 위하여”
2010 6자회담 참가국에 드리는 제안서
- 내용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화와 협력 추진 및 6자회담 개최, 9.19 성명 이행
및 정전협정의 한반도평화포럼으로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동북아 비핵화 추진
△동북아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노력 △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325’ 이행 △6자회담을 위한 여성협의회 추진 △북한 지원 프로그램에 여성 직
원 30% 충원
- UN SCR 1325 관심 확대

3) 한반도 분단 현실 인식 심화

- 개성·DMZ 방문, 대인지뢰 피해자와 면담은 한반도 분단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
식하는 기회를 제공

4) 정부와 민간의 협력(트랙 I-트랙 II 협력)

-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법 4Cs
소통(communication 정보 공유, 분석 공유) 조율(coordination 공동 계획), 협동
(cooperation 자원 공유, 각기 주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협력(collaboration 협동
해서 활동, 공동 사업의 효과의 극대화)
- 한반도 평화과정의 여성 개입을 위해 정부와 협력 추구하지만 동북아지역 정부 별로 관

심이 없음. 이 지역 UNSCR 1325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가진 정부가 없음

cf. 유엔안보리결의문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GO, 여성단체 등은 국가행동계획안에 들어와 있다.

- 평화와 안보영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메커니즘 개발 필요
-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 국가 대립 격화 속에서 정부와 민간의 관계 더욱 약화
- 각국 정부와 소통 통로 없음

5) 북한의 불참

- 미완의 여성6자회담
- 북한의 부재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불안정성 반영
- 북한 참가 문제-정치군사적 접근/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6) 인적, 재정적 infra 취약

- 재정, 조직, 홍보, 정책적 한계

■ 참고자료 6자 회담 참가국에 드리는 제안서 (2010.10.6)

2010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참가여성들은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긴장, 군사적 갈등과 전쟁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이 한반도 내부와 주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전쟁도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상호신뢰와 함께 화해, 경제적 협력, 사회문화교류, 그리고 외교적 정상화를 통해서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강력히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남북 사이에 인도적 지원과 대화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화로 발전할 것을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60년, 6·15 공동선언 채택 10년,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채택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반도가 평화의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1. 각국 정부가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과 의약품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2. 경제제재와 군사훈련보다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기를 요청합니다. 남북회담, 북미회담, 북일회담 및 6자회담은 가능한 빨리 개최되어야 합니다.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 및 북미·북일 정상화를 포함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전협정의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갈등해결, 평화유지,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촉구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작성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다자협상에서 주요 협상대표, 워킹그룹 참가자와 참관자(observer)로서 여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6자회담을 위한 여성협의회를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 북미, 북일 대화를 포함한 공식적인 양자회담 및 6자회담을 지원하는 여성들의 트랙 II (Track II) 활동과 여성 NGO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노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제공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관점이 통합되기를 촉구합니다.

5. 각국이 수행하는 북한 지원 모든 프로그램에 자격이 잘 갖추어진 여성 직원 충원을 요청합니다. 경영자와 프로그램 직원에 여성이 최소 30%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며, 관련 국가에서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고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0년 10월 6일

2010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참가자

한국평화운동 사례 : 평화군축박람회,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여옥 / 전쟁없는세상

한국사회는 강력한 군사주의 속에서 평화운동의 성장이 더디었다고 평가되지만, 조금씩 변화해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평화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과 최근 평화단체들이 함께 준비한 평화군축박람회를 중심으로 한국 평화운동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지난 수십 년 동안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은 계속 이어져왔지만, 이 문제가 한국사회에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이 지나서부터였다. 당시 누적된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가 1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문제로 치부되어왔던 병역거부는 2001년 딸 불교신자이자 평화주의자인 오태양이 공개적인 병역거부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 2002년 초, 병역거부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36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토론회, 강연, 공청회, 캠페인, 기고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병역거부문제를 공론화시켰다.

운동 초창기에 병역거부운동이 마주쳐야했던 비난과 질타는 엄청났다. 분단된 ‘반공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의 가치는 절대적이었으며 더 많은 무장은 사회적 ‘선’이었고, 이에 대한 비판은 철저히 부정당했다. “입영율 100% 달성”을 사회적 목표로 삼으며 징병제와 군대를 성역화시켰던 군사정권을 겪은 한국 사회에서 군대문제는 최소한의 공론화조차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폭력으로서의 군대에 대한 성찰은커녕 민주주의와 관용에 대한 시각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묵묵히 감옥으로 향했던 병역거부자들이 견뎌 낸 고통의 시간들,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병역거부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사법부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선고하던 관례를 깨고 재징집 당하지 않을 최소 형량인 1년 6월이 선고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2년에는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2004년에는 첫 무죄선고가 나왔다. 2004년 하반기에 임종인 의원과 노회찬 의원 각각의 대표발의로 두 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하였다. 2005년 말에는 국가기구 중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결정을 반복해서 내린 것이다.

앞선 사회적 변화들을 통해 결국 광복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되어왔던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을 멈출 수 있는 결정적 문턱까지 다다랐다. 국방부는 2007년 9월 ‘병역이행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 계획대로라면 2009년부터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이 아닌 대체복무를 택할 수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국방부는 입장을 급선회했다. 국민공감대 운운하면서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방기했던 국방부는 2008년 여름부터 원점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언론에 흘리더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결국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를 했다. 백지화의 근거는 병무청 연구용역 결과 중 극히 일부분인 여론조사 부분이었는데,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연구용역보고서의 결론은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한다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중 일부인 여론조사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이용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시민사회가 애써 이루어놓은 변화는 그렇게 쉽게 뒤집히고 말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낀 것은 병역거부운동에 참여한 이들만은 아니었다. 시대가 변하고 병역거부운동이 꾸준히 진행되어오면서 군사주의와 애국주의가 팽배한 한국 사회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여름, 국가인권위는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

했다. 사법부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병역거부 관련 위헌제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입법을 통한 해결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미약하지만 분명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계속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0년 개인청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국제적으로 병역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반전단체 WRI 역시 2009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초점국가로 한국을 선정하고 한국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렸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국격’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는 나라이지만,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비판을 무시하면서 한국 정부와 사회는 병역거부자들을 계속 감옥으로 밀어 넣고 있다.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운동은 대체복무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필연적으로 운동이 진행되면서 병역거부는 대체복무제를 넘어서는 쟁점을 사회에 던지고 있다. 먼저 병역거부는 한국사회에서 군대와 군인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를 사회적으로 일깨우고 있다. 군대는 언제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전투를 준비하는 곳이다. 그 조직의 목적은 전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적’으로 간주된 상대방을 죽여야 한다. 때문에 군대는 살인을 훈련하는 곳이다. 군대가 필요악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전쟁과 군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지향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군대의 본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외면되었고 감추어져왔으며, 오히려 미화되고 신성하게 취급되었다.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적 상황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대한 논의는 금기에 가까웠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바로 병역거부운동이었다. 살인훈련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는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 군대가 전쟁을 위한 도구이고, 살인을 위한 조직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병역거부자가 자각한 “군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그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부당한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과 실천은 전쟁에 저항하는 원초적인,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였다. 병역거부가 가진 “폭력에 대한 성찰”은 최근 한국의 무기산업을 감시하는 운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이 판매한 무기가 분쟁지역에서 사용되고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무기수출로 인해 챙기는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평화군축박람회

한국은 세계에서 순위권에 드는 무기 수입국이자 수출국이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제3위의 무기수입국이고, 방산수출액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09년 11억7000

만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15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달러 확보를 위해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정책 속에서 무기의 생산과 수출을 주요한 성장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어 이러한 무기산업과 거래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기는 단순히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다. 무기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와 기업은 국산 개발한 무기들을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지만 엄청난 세금을 투자하여 개발할 만큼 지금 우리에게 그 무기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 무기들이 어디로 팔려나가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국군의 날이 있는 10월에 개최되던 방위산업전시회는 2009년부터 우주항공분야의 '서울 에어쇼'와 육군의 지상무기 중심의 '디펜스 아시아'가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로 통합되면서 2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어 규모가 더욱 커졌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 전쟁 60년 기념행사가 연중 내내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특히 국군의날 행사는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와 통합해서 치러져 평소보다 큰 규모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 '10대 명품무기'를 전시하기도 했다.

강한 무기가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는 이유는 이윤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무기를 팔아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무기를 팔기 위해 무기가 필요한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진다. 또한 그렇게 수출된 무기는 그 자체로 분쟁의 원인이 되며, 결국 무력충돌과 전쟁을 촉발하는 매개체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것은 오래된 일이라 이 문제에 주목하고 무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세계 곳곳에서 있어왔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별로 주목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매년 무기거래액은 증가하고, 넘쳐나는 무기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강한 무기들은 누군가의 평화를 위협하고 삶을 위태롭게 한다. 위협을 느낀 또 다른 누군가는 더 강력한 무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끊임없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평화운동 내에서 무기문제, 군축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꾸준히 존재해왔지만, 평화운동 공통의 의제로 의견이 모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2009년 평화활동가대회에서는 전쟁수혜자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모임을 하던 활동가들이 워크숍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무기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그 이후 무기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방식을 고민하던 평화활동가들은 대안적인 박람회를 열기로 하고 2010년 3월말부터 모임을 시작했다. 2010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는 여러 차례 준비모임과 내부워크숍을 거쳐 6월

에 정식으로 발족했고, 총 14개 단체로 구성되어 이후 준비과정을 진행시켜나갔다. (14개 단체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노틸러스아리, 무기제로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 전쟁없는세상,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참여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다, 평화박물관, 한신대 평화와공공성센터) 박람회 준비위원회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장갈등과 군비확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 평화공존을 향한 시민 대안과 상상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2010 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를 2010년 국군의날 즈음인 10월 2-3일에 개최했다.

2010 평화군축박람회에서는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는 한국의 무기 7개와 관련 이슈 7개를 선정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총 60여개의 판넬을 중심으로 <전시마당>을 구성했다. 그 외에도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는 평화 <강연마당>, 세계 각국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평화운동의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 및 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영상마당>, 직접 그리고 만들고 읽으면서 평화감수성을 키워하는 <체험마당>을 준비했다. 그리고 저녁에 열리는 <공연마당>은 인권영화제와 함께하는 영화영상과 원폭피해자 2세와의 대화, 평화를 노래하는 문화제를 마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평화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분류	내용
전시마당	▷ 몹쓸무기, 나쁜무기, 비싼무기展 - 핵무기 / No 핵무기 Yes 비핵지대 - 집속탄 / 죽음의 비 - 무기거래금지협약/ 무책임한 무기거래 뿌리 뽑아라. - 차기 전차 K2 / 불필요한 고성능 전차 - 한국형 헬기 / 최대 규모의 예산을 먹는 공룡 - 이지스함 / 평화에 반하는 대양해군의 꿈 - 차기 전투기 / 국가예산 축내는 전투기 사업
	▷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展 - 실현가능한 꿈, 군축 / 국방예산 삭감 - “우리는 파병을 반대한다” / 전쟁반대, 파병반대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 천안함 진상규명 - 21세기 “모순(矛盾)” 전쟁 / MD 도입반대 - 평화를 위한 나눔 / 대북지원확대 - 평화의 섬 넘보지마 / 제주해군기지 반대 - 기지 정화에 수 조원 / 미군기지 환경오염 고발
영상마당	- 오래전부터 무기의 생산과 거래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온 외국단체들의 활동 동영상 - 끝나지 않은 전쟁, 집속탄 (MBC 더블유) - 제4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 대인지뢰>(프랑스/르난도 트루에

	바 외/40분)
강연마당	위험한 무기들을 감시하라 / 이시우 (토, 1시) 시민들의 평화 만들기 : 안보-군사주의에 대한 저항 / 이대훈 (토, 5시) 중동 유혈분쟁 이야기 / 김재명 (일, 1시) 천안함을 묻는다 / 이태호 (일, 5시)
체험마당	‘2010 어린이 평화책’으로 선정된 책을 전시하고 읽는 어린이 평화책 모기장도서관과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 평화타일 그리기,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나뭇가지로 만드는 숲대 만들기 등
공연마당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과 함께하는 영화상영(토, 6시) <원자폭탄>(미국, 일본/캐리 쇼느게블/57분) + 원폭피해자2세와의 대화 <악자지껄 문화제>(일, 6시) 출연 : 길바닥평화행동(조약골, 별음자리표, 명구), 봄로야, 아샬(SOUND SMITH 보컬), 아마가타 트웝스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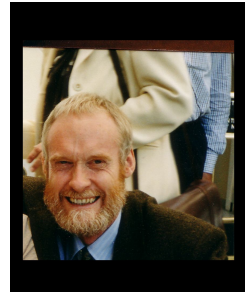
2010 평화군축박람회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곳은 날씨 속 야외에서 진행되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 평화와 군축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각 단체들의 바쁜 일정과 열악한 사정 때문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시민들을 만날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이후 이를 보완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국회전시회와 함께 정책제안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제작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일반 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한 길거리, 지역순회전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0 평화군축박람회 행사는 끝났지만 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문제가 전문가만의 것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하고, 강한 무기가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기의 존재자체가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평화에 반하는 방위산업업을 국가의 미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회적 투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운동이 더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다. ※

■ 발제자 소개 ■

○ 콜린 아처(Colin Archer, 영국)

- 현직 :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100년 넘는 평화단체로 노벨평화상 수상) 사무처장
- 약력
- 197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와 인권 운동 전개, 198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 '핵군축 캠페인'을 전개하며 핵 문제에 관한 활동 전개
- 법과 평화센터(Institute for Law and Peace) 공동 창립자, 국제평화센터(International Peace Bureau) 사무처장 역임
- World Court Project, Abolition2000(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 Hague Appeal for Peace(※평화교육운동), 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평화교육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2004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문화포럼(the Barcelona Forum of Culture)에서 5일간 진행된 'Towards a World Without Violence'(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회의 공동기획 등.
- 저서 : 전쟁 또는 복지? 21세기 개발을 위한 군축(Warfare or Welfare? Disarmament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2005), 출판된 '누구의 우선순위인가? 군비와 사회복지비 캠페인을 위한 조언(Whose Priorities? A guide for campaigners on military and social spending)'(2007)



○ 아키라 가와사키(Akira Kawasaki,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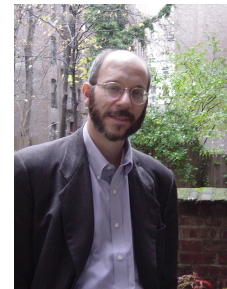
- 현직 : 일본 도쿄 소재 시민단체 피스보트(Peace Boat www.peaceboat.org) 실행위원
- 약력
- 1998-2002년 일본 시민단체 피스데포 (Peace Depot)에서 활동, Abolition2000 (핵무기철폐운동) 글로벌위원회 멤버이자 '핵무기 철폐를 위한 국제 캠페인(ICAN)'의 부의장으로써 핵군축 운동을 전개, '국제 핵군축 및 비확산 위원회(ICNND)'의 공동의장의 NGO 고문



- 2008년부터 가와사키는 원자폭탄 피해 생존자들이 세계를 여행하며 핵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세계 향해 : 피스보트 히바쿠사 프로젝트’ 진행
- 저서: ‘핵확산’(2003, 도쿄, Iwanami Shoten), 대량살상무기위원회(WMDC) 2006 보고서 ‘공포의 무기’의 일본판 주 번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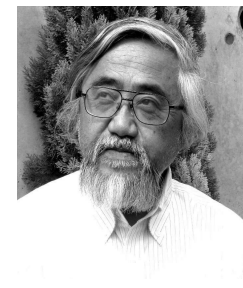
○ 존 페퍼(John Feffer, 미국)

- 현직 : 정책연구소(IPS) 국제정책 포커스 공동소장
- 약력
- 워싱턴 DC 소재 Provisions 도서관 글쓰기 연구원, 스탠포드 대학의 한국학 PanTech 연구원, World Policy Journal 전(前) 부편집장,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동유럽 및 동아시아 국제문제 담당자,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ASCK) 자문위원, Herbert W. Scoville단체 펠로우십, Blue Mountain센터와 Wurlitzer재단의 전속작가
- 저서 : ‘북한, 남한 : 위기 당시 미국의 정책’(2003), 뉴욕타임즈, Boston Globe, Salon, The American Prospect, The Nation, TomDispatch 등 각종 언론에 글과 칼럼 게재



○ 유아사 이치로(Yuasa Ichiro, 일본)

- 현직 : 피스디포 대표
- 약력
- 1975년 도호쿠대학 석사과정 수료 (지구물리학), 과학기술의 존재방식을 묻는 反공해운동을 시작으로, 1984년 핵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배비(配備)를 계기로 반전평화운동 전개
- 피스링크 히로시마현 쿠레시 이와쿠니 조력자. 탈군비 네트워크 캐치피스 전국운영위원. 핵폐기를 지향하는 히로시마의 모임 운영위원, 2008년 피스데포 대표 취임.
- 저서 : ‘평화도시 히로시마를 묻다’(1995), ‘과학의 진보란 무엇인가’(2005) 등



○ 한 후와(Han Hua, 중국)

- 현직 : 베이징대학 부교수, 국제학연구소(SIS) 군비통제 및 군축센터 소장
- 약력
 - 남아시아 국제관계, 국제군비통제·군축·비확산, 미국 정치학과 대외정책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남아시아 및 군비통제 및 비확산
 -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미국),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스웨덴), The Stimson Center and Monterey Center for Nonproliferation in Washington DC and Monterey(미국), The Victoria University(캐나다), and the Peace and Conflict Institute, Uppsala University(스웨덴) 방문연구원
 - 역내 핵 비확산, 신뢰구축방안, 핵군축 관련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수행
- 공동저서 : '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과의 관계(2001), '핵실험금지협정 이후의 남아시아 군비통제'(1997) 군비통제, 핵 비확산, 남아시아 관련해 중국과 해외 저널과 언론사들 등 광범위하게 글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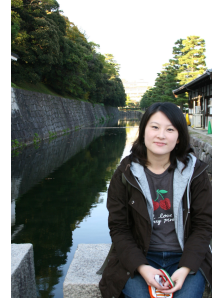
○ 정경란(Gyung-Lan Jung, 한국)

- 현직 :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코디네이터이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약력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방문연구원 역임
 - 북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AFSC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조직한 갈등해결훈련프로그램과 조지메이슨대학의 갈등해결분석연구소의 고급갈등해결프로그램 수료
 - 여성평화운동, 남북여성교류, 갈등해결 등에 관심
- 저서 : “남북한 여성의 현단계”, 분단50년의 구조와 현실(민중사), “9.11테러 이후 평화운동”, 한국 인권의 현황과 과제(한국인권재단), “한국여성평화운동과 국제연대”, 한국여성평화운동사(한길사), 민간협력 : 북한과 미국의 교류, POSCO 청암재단 시민단체활동가 연수프로그램 연구보고서 등



○ 여옥(Yeo Ok, 한국)

- 현직 : <전쟁없는세상>, <무기제로팀>에서 활동.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화운동에 참여
- 약력
 - 2009년 WRI와 병역거부연대회의가 주최한 2009 세계병역거부자의날 한국 행사 준비팀
 - 2010년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 이태호(Taeho Lee, 한국)

- 현직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약력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책위원(2005-)
 - 미국 뉴욕 콜롬비아대학 방문연구원 역임
 - 참여연대 입사(1995) 이래, 부패방지운동을 담당하면서, 그 일환으로 K1전차 개발, F-15해외구매 사업 등 국방계약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지원
 - 2003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족 이후, 군축과 안보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지향하는 기획사업과 연대 사업을 기획 및 조직. 아프간 이라크 파병반대운동(2003-), 한국형헬기 개발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테러방지법/테러자금조달방지법 제정 반대운동, 국방개혁안에 대한 시민대안 제안,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운동 등 진행
- 저서 : 『2008시민평화백서』 (공저, 아르케, 2008), 『2010시민평화백서』 (공저, 검등소, 2010), 『천안함을 묻는다』 (공저, 창작과 비평, 2010),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공저, 한겨레출판, 2010), 주요 논문 혹은 보고서로는 “이라크반전평화운동과 한국 시민사회(2006, 世界)”, “국방개혁2020안의 6가지 문제점(국회 국방위 공청회 진술서 2006)”,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의 문제점(국회 재경위 공청회 진술서 2007)”, “평화국가만들기와 시민사회운동(시민과 세계 제10호, 2007)”, “대테러 전쟁과 미국의 시민운동(POSCO 청암재단 시민단체활동가 연수프로그램 연구보고서, 2009)” 등

